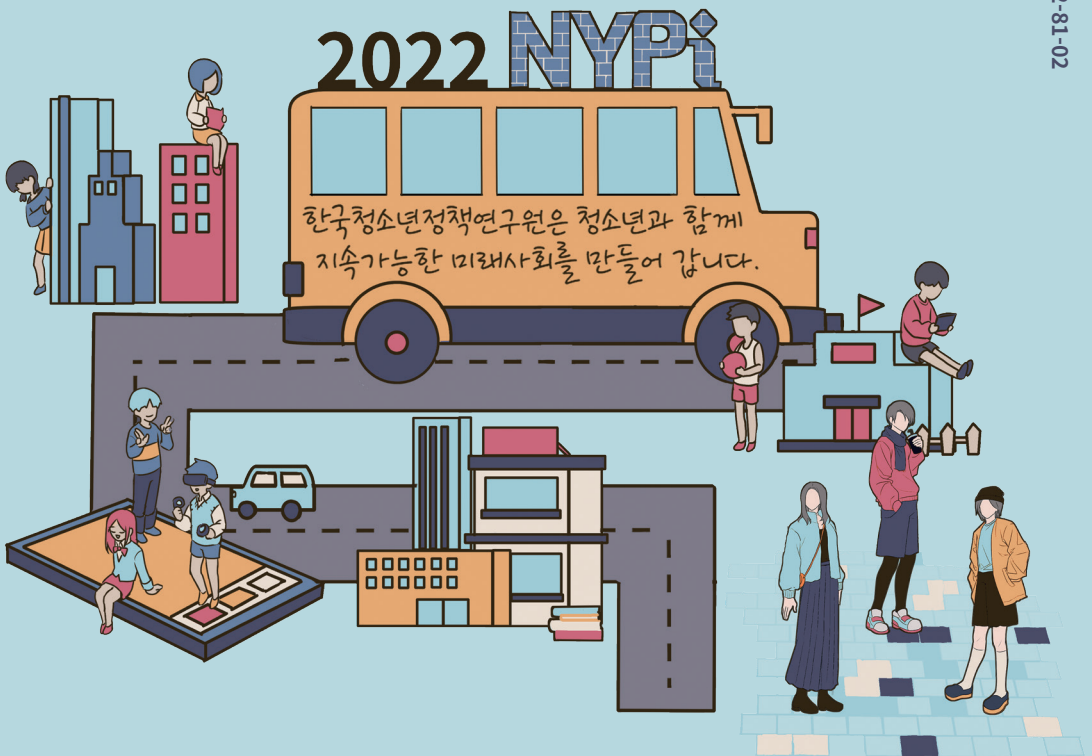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홍성호 · 장수명

연구보고 22-일반09-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협동연구총서 22-81-02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저 자 홍성호, 장수명

연구진 연구책임자_홍성호(공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_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공주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문호영 연구위원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다인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공주대학교	홍성효 공주대학교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 대비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대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 방향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 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혹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 내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들 취약계층 청소년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함.
-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을 학습시간 등에 의한 교육생산함수에서의 투입요인과 학업성취 등에 의한 교육생산함수에서의 산출 요인,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과 같은 장기 혹은 생애에 걸친 요인 등을 통해 진단함.
 - 일반 청소년 대비 상대적 여건 혹은 현황, 취약성의 시계열적 변화, 취약계층 내 상대적 취약도 등을 취약성 진단의 기준으로 설정하며, 진단의 주요 내용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육서비스의 질, 주관적 학업성취 혹은 학업성적 만족, 학교생활 만족 등을 포함함.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 교육과 관련한 지원정책에 한정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인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정책을 통한 성과를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함.

■ 연구 방법

● 통계분석

-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t-test 혹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중차분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혹은 패널자료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포함하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을 활용함.

● 선행연구 고찰

-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나 규모의 산정, 취약성의 진단, 그리고 정책의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함.

● 전문가 자문

- 외부 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가 적합한지, 통계기법이 타당한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 만8~23세 청소년의 2.3%에 해당하는 176,036명의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에 속하고,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1,206,805명(16.0%),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151,613명(15.3%), 시각장애, 청각장애, 육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언어장애 가운데 하나라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은 486,486명(6.5%),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점유하는 주택의 거주층이 (반)지하 혹은 옥상(옥탑)에 해당하거나 점유형태가 월세 혹은 사글세에 해당하는 가구 내 청소년은 1,367,760명(18.2%)에 해당함.

●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 학업성취에 있어, 저소득가정과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투자에 서의 격차에 기인함. 연간 교육비 지출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429만원만큼 적으며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5.1%p만큼 낮음.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짐.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은 만족의 정도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며,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중단 경험이나 의향을 갖도록 함.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교육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 취약성이 보다 높은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에게서 높은 수혜율을 나타내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들 가운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청소년의 교육부문 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계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청소년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산재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자료의 생성 및 유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별도의 기능과 역할-이를테면, 유관기관들 간 상호 개방과 연계 혹은 자료 간 조정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주요 청소년정책 이슈별 부가조사 실시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청소년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는 자료들이 있으나 조사항목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 시점 간 조사항목들에서 변화가 적은 편이며, 이는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사가 시기별 이슈들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청소년 대상 시기별 주요 이슈나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사 풀(Pool)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정책의 평가 등에 이용하거나 해당 이슈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개선과 장기 효과의 측정
 - 교육격차가 해당 개인의 삶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생애에 걸친 장기적 분석의 결과는 전무한 상태임.
 -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특정 계층을 위한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이를테면, 고용이나 인적자본의 증가 및 이를 통한 노동생산성과 국민총생산의 증대,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한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함.

핵심 정책제언

● ‘공평’이 아닌 ‘공정’

- 청소년기는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학습 기회가 단순히 공평의 개념에서 제공되기보다는 공정의 개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임. 공평이라 함은 취약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동일선상에서 학습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공정의 개념은 취약성에 기초하여 이들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위기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대안 모색

- 위기 청소년 대상을 위한 장기적 지원 방향-2대 경로-교육 경로와 노동시장 경로를 결정한 판단을 위한 기초 정책들이 필요함.
- 가정이 독자적으로 위기 청소년의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이었다면 가족과 보호자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 교육 경로를 위한 정책-어린 청소년의 경우 교육 경로(교육 체제-학교 체제)로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 노동시장 참여를 위기 청소년의 위기 탈출 경로로 삼는 정책이 필요함.
- 스포츠(sports), 예술 활동, 자연친화 활동(하이킹(hiking)과 캠핑(camping) 등) 등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중심으로 자신의 심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
정책 평가

연구보고22-일반09-0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 내용	6
4. 연구 방법	7

II.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1. 추정의 필요성	11
2. 취약계층의 구분	12
3.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결과	19
4. 소결	22

III.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1. 진단 기준과 내용	27
2. 진단 방법	28
3. 진단 결과	29
4. 소결	54

IV.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1.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	59
2. 정책(사업)의 이용 혹은 수혜와 만족도	63
3. 정책(사업)의 효과	66
4. 소결	77

V.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1. 독일	81
2. 핀란드	91
3. 노르웨이	95
4. 프랑스	100
5. 소결	108

VI.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13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15
3. 향후 과제	121

참고문헌	123
------------	-----

부 록	135
-----------	-----

Abstract	155
----------------	-----

표 목차

표 II-1.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추정 규모	13
표 II-2. 환경변화의 영향 : 이중차분모형	16
표 II-3. 환경변화의 영향 : 패널로짓모형	18
표 II-4. 취약계층 청소년의 유형과 규모 : 만8~23세 청소년	21
표 II-5. 취약계층 청소년의 유형과 규모 : 초중고 학령기 청소년 ..	22
표 III-1.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29
표 III-2.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0
표 III-3.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관련 취약성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1
표 III-4.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32
표 III-5. 한부모 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33
표 III-6.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3
표 III-7.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34
표 III-8. 희망 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	35
표 III-9. 희망 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 : 순서형 로짓모형	36
표 III-10.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거주지역규모	37
표 III-11.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가구형태	38
표 III-12.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저소득 가구	39
표 III-13.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농촌 거주 가구	40
표 III-14.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장애가구	40
표 III-15. 연간 교육비 지출액 규모의 집단 간 차이	42
표 III-16. 연간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집단 간 차이	43
표 III-17. 학업성취도의 시계열 변화	44

표 III-18. 사교육 경험 비중의 시계열 변화	45
표 III-19.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주일 총 사교육 시간의 시계열 변화	46
표 III-20. 학업 중단 경험의 시계열 변화	48
표 III-21. 학업 중단 생각 여부의 시계열 변화	49
표 III-22. 학업 중단 의사(중단 예정)의 시계열 변화	49
표 III-2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정도의 시계열 변화	50
표 III-24. 희망 교육수준의 시계열 변화	51
표 III-25. 희망 교육수준의 시계열 변화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2
표 III-26. 다문화가정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의 시계열 변화	53
표 III-27.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의 시계열 변화	53
표 IV-1.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9
표 IV-2.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60
표 IV-3.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61
표 IV-4. 방과 후 시설(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비중	62
표 IV-5.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한국어, 이중언어	63
표 IV-6.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학습지도, 방문학습지	64
표 IV-7.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특기적성, 현금지원	64
표 IV-8.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물적지원, 진로 프로그램	65
표 IV-9.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2-3차 조사	68
표 IV-10.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3-4차 조사	69
표 IV-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4-5차 조사	70
표 IV-1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5-6차 조사	71
표 IV-13.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6-7차 조사	72

표 IV-14.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7-8차 조사	73
표 IV-15.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8-9차 조사	74
표 IV-16.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패널분석, 학습보조 선생님	75
표 IV-17.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패널분석, 학습지 지원, 학습지원	76
표 V-1. 연방주별 의무교육 대상 및 내용	83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6
그림 IV-1. 연차별 교육 관련 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별 학업성취	67
그림 V-1. 독일의 조기 학교 중퇴자(18-24세) 비율 변화	84
그림 V-2. 독일의 특수교육 발전 형태	87
그림 V-3. 독일의 통합 수업 모습	88
그림 V-4. 아동 및 청소년정책 개발프로그램 LANUKE 계획	92
그림 V-5. 핀란드의 교육과 학위체계	94
그림 V-6. 핀란드의 특수지원제도 발달	95
그림 V-7. 노르웨이의 학교 제도	98
그림 V-8. 프랑스의 정규교육제도와 직업교육훈련 과정	104
그림 V-9. 청소년 연령별 학령인구 재학 비율(2000-2015)	105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 내용
- 4. 연구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계층 간 자녀의 교육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와 양육시간(강한나, 박혜원, 2013)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학업성취에서의 차이와 연결된다(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2007). 일례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자료를 활용한 박경호 외(2017)의 분석 결과는 수학 학업성취도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소득을 포함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받고(정익중, 2011), 이러한 차별적 기회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확대한다(류정순, 1998).¹⁾ 다수의 연구-이를테면, 구인화와 김정은(2015), 최필선과 민인식(2015), 김영철(2011) 등-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을 역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청소년의 여건(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사업실패나 실직 등 가정 내 여건)이나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교육에서의 취약성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돈민, 윤여각, 현영섭, 강대중과 이세정(2013)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게 있어 부모의 생존, 재혼, 사망 등에 의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구의 경제적 형편-이를테면, 가구소득이나 사교육비 등-과 함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김영란과 김민정(2016) 역시 가족역량, 부모의 학습지원, 부모의 애정이나 관심과 같은 가족기능변인이 학습습관과 자아존중감의 매개요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김영은과 엄명용(2018)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1) 마강래, 강은택과 임보영(2016)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과 주요 10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제시한다.

2) 김영철(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은 상위 10분위의 소득을 갖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해당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주장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가정 내 사회자본으로 해당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사회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현지영, 김경근, 2015).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진로와 관련해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생애기회를 개선할 수 있다(김영은, 엄명용, 2018).

이시효(2020)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학습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수준에 의한 거주지 기준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에서의 열악성을 지적한다. 도종수(2005)는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 이외에도 지역의 규모 간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군지역인 농촌에서 가장 낮고 중소도시나 광역시 역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거주지역 또한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제시한다.

이주배경 학생은 부모와의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김혜미, 문혜진, 2013; 박희훈, 오성배, 2014; Weber, Kronberger, & Appel, 2018). 더불어, 언어능력의 차이나 자아정체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 역시 이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야기할 수 있다(Bankston & Zhou, 1995).

정익중, 이수진과 강희주(2020), 조정래(2021)는 코로나19(COVID-19)를 전후로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며, 전자는 학습시간의 증가가 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나타남을 보여주는 반면에 후자는 취약계층 가정-이를테면, 빈곤가정, 한부모가정, 군지역 거주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의 주중 학습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제시한다.

교육격차는 청소년 시기의 제반 문제들에 국한되지 않고 이들의 생애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관련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³⁾ 더불어, 이러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와 이들의 취약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 대비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대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 방향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추진체계

1) 인적 구성

연구의 추진은 본 과제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협동과제의 특성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총괄 과제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경제학, 분석학, 교육학, 정책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진을 구성 및 운영한다.

2) 연구의 진행

본 과제는 통계분석 및 이의 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분석내용과 결과가 총괄 과제의 연구 내용이나 연구방향과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제 연구진과 총괄 과제 연구진 간 수시로 협의와 조율을 추진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보고회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더불어, 자문회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통계분석과 관련하여 분석자료의 적합성, 통계기법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한다.

3)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청소년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이 예산의 투입을 수반하고 이러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여러 정책대안들 가운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의 관점에서 정책의 보다 직접적인 대상이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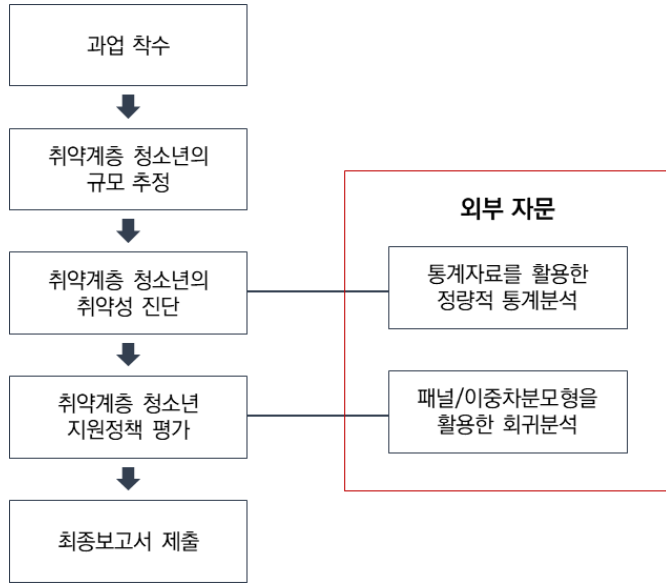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 연구 내용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 취약성에 대한 구분기준은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저소득 가구), 문화적 요인(재외국민, 무국적,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가족), 가정 및 가구구성 요인(입양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인이 있는 가정, 가정 밖 청소년, 가정 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범죄피해가정 청소년, 실종 청소년, 청소년(한)부모, 나홀로(돌봄)청소년), 학교요인(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피·가해 청소년, 비행·범죄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청소년), 지리적 요인(농산어촌, 도시낙후지역), 개인 속성 요인(장애 청소년, 중독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자살, 자해, 우울 등)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도매에 비해 학업성적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등에 따르며, 이들을 근거로 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혹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 내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들 취약계층 청소년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한다. 이는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추진에 있어 예산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을 학습시간 등에 의한 교육생산함수에서의 투입요인과 학업성취 등에 의한 교육생산함수에서의 산출 요인,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과 같은 장기 혹은 생애에 걸친 요인 등을 통해 진단한다. 특히, 일반 청소년 대비 상대적 여건 혹은 현황, 취약성의 시계열적 변화, 취약계층 내 상대적 취약도 등을 취약성 진단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진단의 주요 내용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육서비스의 질, 주관적 학업성취 혹은 학업성적 만족, 학교생활 만족 등을 포함한다.

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교육과 관련한 지원정책에 한정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책에 대한 인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정책을 통한 성과를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 혹은 이러한 변화의 집단 간 차이 등을 통해 이뤄진다.

4. 연구 방법

1) 통계분석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t-test 혹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중차분 혹은 패널자료분석을 포함하는 회귀분석 등을 활용한다.

2) 선행연구 고찰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나 규모의 산정, 취약성의 진단, 그리고 정책의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한다.

3) 전문가 자문

외부 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가 적합한지, 통계기법이 타당한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한다.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 1. 추정의 필요성
- 2. 취약계층의 구분
- 3.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결과
- 4. 소결

1. 추정의 필요성

1)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의 수립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적정 예산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요구된다. 특히, 유형별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파악이 이뤄져야 사업별 예산의 적정 규모 산출이 사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2) 정책 추진 시 전체 효과의 산출

정책의 추진에 따른 총량적인 효과의 산출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만일 유형별로 취약계층 청소년이 중복된다면,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여러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수혜 청소년의 수는 과대하게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성의 구분이 다층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취약계층 내 집단 간 상대적 취약성 도출

유형별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이 상이할 것이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유형의 취약성이 중복되는 청소년-이들테면,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정책지원이 시급한 청소년 대상을 도출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약계층의 구분

1) 선행연구에서의 구분

취약계층의 구분에 있어서 김성식(2020)은 경제, 문화, 지역, 가족, 개인, 디지털 요인 등을 고려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저소득이나 빈곤, 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 탈북, 난민 등의 이주배경, 지역의 차원에서 농산어촌이나 도시낙후지역, 가족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가정 내 자녀에 대한 학대 혹은 방임, 개인 차원에서 성, 연령, 장애, 디지털 요인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 등과 같이 다차원적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이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정의 및 구분된다.

김성아(2022)는 취약계층 청년을 인적 속성(장애 청년, 이주배경 청년), 관계 특성(청년 부양자, 고립 청년), 일자리 특성(미취업 청년, 취업 청년), 경제력 수준(저소득 빈곤 청년,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에 의해 유형화한다.

인적 속성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은 장애 청년과 이주배경 청년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등록장애 청년과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으로 나누어지며 전체적으로 337천명(3.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배경 청년은 출생지가 북한이거나 외국인 경우와 다문화 가정 내 자녀로 구분될 수 있다.

관계 특성을 기준으로 청년 부양자와 고립 청년으로 구분되며, 청년 부양자는 다시 경제적 부양 청년, 한부모 청년, 청년 돌봄자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부양 청년은 본인의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가구 총 경상소득의 75% 이상인 청년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으로 정의되는 고립 청년은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에서 339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자리 특성에 의한 구분에 따르면,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과 장기 비자발적 실업 청년을 포함하는 미취업 청년과 저임금 근로, 불안정 고용, 열악한 고용 환경에 처한 취업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경우로 정의되고, 불안정 고용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와 1인 자영업 종사자로 정의되며, 열악한 고용 환경은 주 50시간 초과 근로나 단시간 근로와 같은 불완전취업으로 정의된다.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을 나타내는 니트(NEET) 청년은 1,969천명으로 그 비중이 1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표 II-1.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추정 규모

취약계층 청년 유형			추정규모 (천 명, %)	조직적 정의	자료원
인적 속성	장애 청년		156 (1.4)	등록장애 청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20.12)
			181 (1.7)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 (표본)
	이주배경 청년		100 (0.9)	출생지가 북한 또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2015년 인구총조사 (표본)
			-	다문화 가족 자녀	-
관계 특성	청년 부양자	경제적 부양 청년	285 (2.6)	본인의 사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이 가구 총 경상소득의 75% 이상인 청년	제15차 한국복지패널 (2019년 기준)
		한부모 청년	158 (1.5)	한부모 가정의 부모인 청년	2020년 인구총조사 (전수)
		청년 돌봄자	-	돌봄이 필요한 (조)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을 돌보고 있는 청년	-
	고립 청년		339 (3.1)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일자리 특성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1,969 (19.4)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도 않은 청년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장기/비자 발적 실업 청년	453 (4.5)	장기실업자 또는 비자발적 실업 청년	
	취업 청년	저임금 근로 청년	1,039 (10.9)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1,290 (12.7)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임시, 일용 종사자와 1인 자영업 종사자	
		열악한 고용 환경 청년	790 (7.8)	주 50시간 초과 근로청년과 불완전취업(단시간 근로) 청년	
경제력 수준	저소득 빈곤 청년		842 (7.8)	가구주나 배우자가 아닌데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저소득 빈곤 가구의 청년 가구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년 기준)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		-	경제력 대비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부담이 과도한 청년	-

* 출처: 김성아(2022). 취약계층 청년 - 범위와 정책, 그리고 함의

경제력 수준에 의해 취약계층 청년을 구분하면, 저소득 빈곤 청년과 과도한 부채 부담 청년으로 나눌 수 있다. 저소득 빈곤 청년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842천명으로 추산된다.

2) 본 연구에서의 취약계층 구분

취약계층 청소년을 정의함에 있어 취약성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를 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이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은 자명하다. 청소년기에 있어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가 해당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이러한 환경이나 여건에 처한 청소년을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있어 급격한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는 부모님의 돌아가심, 별거, 이혼, 재혼, 가출, 사업실패 혹은 실직, 질병이나 교통사고의 발생 등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가 해당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 3차,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다. 2003년에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앞에서 언급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학업성취(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 비율)와 삶에 대한 만족(5점 척도, 1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5점 '매우 만족한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방법은 이종차분모형과 패널자료분석을 적용한다. 먼저, 이종차분모형은 환경변화를 겪는 청소년을 실험집단으로 이들의 학업성취나 삶에 대한 만족이 환경변화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다만, 이러한 환경변화와 무관한 단순한 추세 혹은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한 공통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대조군으로서 환경변화를 겪지 않은 청소년의 동일한 두 시점 간 학업성취나 삶에 대한 만족의 변화와 비교한다. 한편, 학업성취나 삶에 대한 만족이 청소년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성향 혹은 기질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분석을 이용한다.

이중차분모형의 적용을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할 수 있다 :

$$y_{jt} = \alpha + \beta_1 treat_j + \beta_2 post_t + \beta_3 (treat \times post)_{jt} + X_{jt} \gamma + \epsilon_{jt}$$

여기서, y_{jt} 는 청소년 j 의 시점 t 에서의 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 비율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treat_j$ 는 청소년 j 가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환경변화를 경험한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서 전자는 실험집단을 나타내고 후자는 대조집단을 나타낸다. $post_t$ 는 분석에 포함된 1차년도 조사와 4차년도 조사 가운데 1차년도의 경우 0, 4차년도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서 실험집단이 환경변화를 경험한 이후 시점 여부를 나타낸다. $(treat \times post)_{jt}$ 는 $treat_j$ 과 $post_t$ 의 교차항이며, 이의 계수인 β_3 이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추정한다. 종속변수가 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 비율로 정의되는 경우, 해당 수치가 클수록 학업성취가 낮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앞서서와 같이 정의된 환경변화가 해당 청소년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β_3 은 양(+)의 값을 갖게 된다. 한편, 종속변수가 5점 척도의 삶에 대한 만족에 의해 정의되고 해당 수치가 1인 경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인 경우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3인 경우 ‘보통이다’, 4인 경우 ‘만족하는 편이다’, 5인 경우 ‘매우 만족한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β_3 은 음(-)의 값을 갖게 될 것으로 가정된다. X_{jt} 는 청소년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성, 거주지역 유형(동지역, 읍지역, 면지역),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주택점유형태를 포함한다. ϵ_{jt}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회귀분석에 앞서 집단별 시점 간 종속변수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환경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 비율이 40.0%에서 50.0%로 상승하여 환경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45.5%에서 42.4%로의 하락과 대조를 이루며 이는 환경변화를 겪은 청소년-즉, 취약계층 청소년-에서의 보다 낮은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반면, 삶에 대한 만족의 경우 환경변화를 경험한 청소년은 3.28점에서 3.24점으로 만족도가 하락하나 환경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게서 나타난 3.49점에서 3.42점에서의 하락에 비해 그 폭이 오히려 작아 이론적 개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표 II-2. 환경변화의 영향 : 이중차분모형

	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 비율		삶에 대한 만족도	
	(1)	(2)	(3)	(4)
취약계층 청소년 여부	5.928 (0.46)	14.782 (1.21)	-0.172* (-2.22)	-0.181* (-2.36)
환경변화 이후 시점	-3.449 (-1.59)	-3.579 (-1.61)	-0.067** (-3.01)	-0.069** (-3.11)
취약계층 청소년*환경변화 이후	2.224 (0.16)	-6.968 (-0.54)	0.040 (0.38)	0.056 (0.53)
남성		0.779 (0.43)		0.204** (9.35)
지역구분(준거집단 : 동지역)				
읍지역		2.894 (0.92)		-0.138** (-2.93)
면지역		2.391 (0.69)		-0.065 (-1.39)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0.001 (1.52)		0.000* (2.18)
주택점유형태(준거집단 : 자가)				
전세		5.066* (2.12)		-0.064* (-2.19)
월세		6.343 (1.35)		-0.115* (-2.00)
무상		-1.910 (-0.29)		-0.093 (-0.88)
사택		27.410* (2.55)		0.142 (1.38)
임대		13.256 (1.09)		-0.453+ (-1.87)
복지시설				-0.408** (-5.64)
관사		33.294** (23.76)		0.534** (6.73)
상수항	45.872** (23.96)	43.319** (17.66)	3.501** (216.25)	3.422** (158.44)
관측수	936	918	5,662	5,576
Adj. R-squared	0.0028	0.0131	0.0027	0.0221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환경변화가 해당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삶에 대한 만족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 비율에 대한 분석에서 청소년 개인의 속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환경변화가 있었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적 비율이 보다 많이 증가-즉,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이론적으로는 개연성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다. 속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변화로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보이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다. 즉, 환경변화가 해당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도 환경변화는 해당 청소년에게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환경변화가 해당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에 실제로 영향이 미치지 못함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환경변화가 비록 분석대상기간 내 발생했으나 환경변화의 징조가 분석기간 이전부터 나타났다면 이는 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낮출 것이다. 실제로, 시점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삶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경우 이의 값이 4 혹은 5이면 삶에 있어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3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를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족함'을 나타내는 이항변수로 재정의한 후에, 패널로지토모형으로 분석한다.

패널로지토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경우와 다소 상이하다. 학업성취와 삶에 대한 만족 모두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 개인의 계수의 차이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고정효과모형이 아닌 임의효과모형이 보다 적합함을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 결과가 제시한다. 청소년 개인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⁴⁾

한편, 삶에 대한 만족 여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며 환경변화를 경험하는 경우 삶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변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빈도를 나타내는 사건은 부모님의 별거나 이혼, 아버지의 사업실패나 실직, 부모님의 병환에 해당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낮은 소득을 갖는 가구 내 청소년이 적어도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함축한다.

4) 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분석에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두 시점 모두에서 모의고사에 응시한 청소년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3. 환경변화의 영향 : 패널로지모형

	전국 규모 모의고사 성적 비율		삶에 대한 만족 여부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취약계층 청소년 여부	-18.223 (-0.54)	0.727 (0.32)	-0.126 (-0.39)	-0.273** (-2.58)
지역구분(준거집단 : 동지역)				
읍지역	23.359 (0.93)	2.788 (0.89)	0.226 (0.48)	-0.457** (-3.04)
면지역	1.342 (0.04)	3.728 (1.07)	0.734 (1.56)	-0.327* (-2.00)
가구 월평균 소득(만원)	0.006+ (1.87)	0.001* (2.00)	0.000** (2.71)	0.000* (2.20)
주택점유형태(준거집단 : 자가)				
전세	-5.371 (-0.36)	5.403* (2.40)	-0.088 (-0.61)	-0.223* (-2.45)
월세	1.492 (0.07)	9.922* (2.18)	-0.224 (-0.90)	-0.577** (-3.56)
무상		-1.033 (-0.16)	-0.537 (-1.20)	-0.584+ (-1.92)
사택		27.033** (2.64)	1.033 (1.48)	0.522 (1.56)
임대		12.737 (0.67)	-0.636 (-0.86)	-0.809 (-1.48)
관사		33.110 (1.23)	13.761 (0.03)	
상수항	40.264** (5.63)	40.677** (36.51)		0.300** (5.83)
관측수	1,046	1,046	2,146	6,456
청년수	1,005	1,005	1,073	3,441
전체 모형 검정(p-값)	0.5058	0.0071	0.0235	0.0000
R-squared				
within	0.1337	0.0096		
between	0.0013	0.0234		
overall/pseudo	0.0023	0.0229	0.0027	0.0221
Hausman 검정(p-값)		0.5241		0.1766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부모님의 돌아가심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장애(가정) 청소년, 농촌 거주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3.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결과

1)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가구 내 만8~23세의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한정하여, 해당 가구 내 외국에서 출생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의 비중으로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비중을 산정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만8~23세 청소년은 7,529,646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76,036명의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에 속한다. 청소년을 초중고 학령기(만7~18세)로 한정하는 경우 해당 연령대의 2.9%에 해당하는 158,054명의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에 속하며, 이는 2015년 기준 2.0%, 119,410명에 비해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규모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자료에 의하면, 만8~23세의 청소년 가운데 16.0%에 해당하는 1,206,805명이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며 초중고 학령기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14.2%에 해당하는 761,672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⁵⁾

3) 농촌 거주 청소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자료에 의하면, 만8~23세 청소년의 15.3%에 해당하는 1,151,613명이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을 초중고 학령기로 한정하는 경우 16.1%에 해당하는 864,925명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혹은 2015년) 2% 표본자료 가운데 인구부문 자료를 이용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확인한 후에 개별 가구에 대한 식별번호를 이용해 가구주택부문 자료에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세대 가구를 가운데 한부모와 미혼자녀, 조부모와 미혼손자녀, 한조부모와 미혼손자녀 가구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을 정의하였다.

것으로 나타나 2015년의 해당 청소년 910,084명(15.0%)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보다 높아졌다. 읍이나 면지역 거주가 반듯이 취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나 다수의 학부모는 학령기 자녀의 존재시 해당 자녀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동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하지만, 높은 주거비용 등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도시지역 거주가 불가능한 가정이라면, 이는 취약계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 청소년 혹은 장애가정 내 청소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2% 표본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학령기의 청소년을 포함하는 4,268,482가구 가운데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제약이 있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는 549,080가구로 12.9%를 차지한다. 청소년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6,071,864명 가운데 11.5%에 해당하는 696,361명이 장애가정 내 청소년에 속한다. 한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제약이 있는 청소년의 수는 36,121명(0.6%)에 해당한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육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언어장애 가운데 하나라도 지니고 있는 초중고 학령기의 청소년은 311,617명으로 5.8%를 차지하고, 만8~23세 청소년은 486,486명으로 해당 연령대 청소년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은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점유하는 주택의 거주층이 (반)지하 혹은 옥상(옥탑)에 해당하거나 점유형태가 월세 혹은 사글세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자료에 의하면, 만8~23세 청소년의 18.2%에 해당하는 1,367,760명이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초중고 학령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들 가운데 13.7%에 해당하는 735,492명이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⁶⁾

6)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혹은 2015년) 2% 표본자료 가운데 인구부문 자료를 이용해 해당 연령대(만8~23세 혹은 만7~18세) 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확인한 후에 개별 가구에 대한 식별번호를 이용해 가구주택부문 자료에서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6) 보다 취약한 청소년

앞에서의 요인들이 복수로 나타나는 청소년의 경우 교육이나 학습활동에 있어 보다 취약할 것으로 가정된다. 만8~23세의 청소년 가운데 농촌지역(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45,699명으로 0.6%에 해당한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86,125명(1.1%),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1,732명(2.5%),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0,369명(2.5%)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20,118명(0.3%),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 42,749명(0.6%),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경우 20,151명(0.3%)으로 나타난다. 장애가정에 속하면서 저소득가정인 가구 내 청소년은 97,006명(1.3%)에 해당하고, 장애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가구 내 청소년은 80,971명(1.1%)에 이른다. 저소득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46,739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6%를 차지한다.

표 II-4. 취약계층 청소년의 유형과 규모 : 만8~23세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명	%
농촌 거주	다문화가정	45,699	0.6
	장애가정	86,125	1.1
	저소득가정	191,732	2.5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190,369	2.5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20,118	0.3
	저소득가정	42,749	0.6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20,151	0.3
장애가정	저소득가정	97,006	1.3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80,971	1.1
저소득가정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346,739	4.6

* 주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초중고 학령기(만7~18세)의 청소년 가운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43,137명으로 0.8%에 해당한다. 농촌에 거주함과 동시에 다른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은 장애가정 58,344명(1.1%), 저소득가정 119,748명(2.2%),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135,604명(2.5%)으로 분석된다.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7,414명(0.3%),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 35,788명(0.7%),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경우 16,786명(0.3%)으로 나타난다. 장애가정에 속하면서 저소득가정인 가구 내 청소년은 57,940명으로 전체 청소년에서 1.1%에 해당하고, 장애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가구 내 청소년은 43,581명으로 0.8%를 차지한다. 저소득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17,031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0%를 구성한다. 한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저소득가정에 속하며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4,819명으로 만7~18세 청소년의 0.6%에 이른다.

표 II-5. 취약계층 청소년의 유형과 규모 : 초·중고 학령기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명	%
농촌 거주	다문화가정	43,137	0.8
	장애가정	58,344	1.1
	저소득가정	119,748	2.2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135,604	2.5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17,414	0.3
	저소득가정	35,788	0.7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16,786	0.3
장애가정	저소득가정	57,940	1.1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43,581	0.8
저소득가정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217,031	4.0

* 주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

4. 소결

1)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와 구분

관련 선행연구와 법령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구분은 경제, 문화, 가정, 학교, 지역, 개인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경제적 관점에서 저소득이나 빈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적 관점에서 다문화, 탈북, 난민 등의 이주배경, 가정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가정 학대 혹은 가정폭력, 가정 밖 청소년, 학교 차원에서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위기),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 지역의 차원에서 농산어촌이나 도시낙후지역, 개인 차원에서 장애, 정신건강(위험),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

중독 청소년, 디지털 요인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 등과 같이 다차원적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이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정의 및 구분된다.

2)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추정 결과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 3차,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패널로짓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환경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있어 삶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경변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큰 빈도를 나타내는 사건은 부모님의 별거나 이혼, 아버지의 사업실패나 실직, 부모님의 병환에 해당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낮은 소득을 갖는 가구 내 청소년이 적어도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함축한다.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부모님의 돌아가심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장애(가정) 청소년, 농촌 거주 청소년 등을 포함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만8~23세 청소년은 7,529,646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76,036명의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에 속한다.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은 16.0%에 해당하는 1,206,805명이며,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5.3%에 해당하는 1,151,613명에 이른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육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언어장애 가운데 하나라도 지니고 있는 만8~23세 청소년은 486,486명으로 해당 연령대 청소년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은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점유하는 주택의 거주층이 (반)지하 혹은 옥상(옥탑)에 해당하거나 점유형태가 월세 혹은 사글세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되며, 1,367,760명(18.2%)이 이에 해당한다. 만8~23세의 청소년 가운데 농촌지역(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45,699명으로 0.6%에 해당한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86,125명(1.1%),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1,732명(2.5%),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0,369명(2.5%)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20,118명(0.3%),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 42,749명(0.6%),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경우 20,151명(0.3%)으로 나타난다. 장애가정에 속하면서 저소득가정인 가구 내 청소년은 97,006명(1.3%)에 해당하고, 장애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가구 내 청소년은 80,971명(1.1%)에 이른다. 저소득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46,739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6%를 차지한다.



제3장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 1. 진단 기준과 내용
- 2. 진단 방법
- 3. 진단 결과
- 4. 소결

1. 진단 기준과 내용

1) 진단 기준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진단은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여건과 현황의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의 학습여건, 학업 성취, 학교생활 만족도 등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기 어려우며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보다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재정립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관련 여건과 현황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기준으로 이들의 취약성이 진단된다.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취약한가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여건과 현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여전히 일반 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 상대적 취약성이 점차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여러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를테면, 가구소득(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 가구형태(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거주지역규모(농산어촌 거주 청소년), 장애 유무(장애가 있는 청소년 혹은 장애인이 있는 가정 내 청소년) 등에 의해 취약계층 청소년 여부가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다수의 기준들에 속하는 보다 취약한 청소년이 존재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약계층 내 상대적 취약도 역시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 내 상대적 취약도의 평가는 해당 자료가 다수의 기준에 의해 취약계층을 세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표본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분석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주요 진단 내용

교육 관련 청소년의 계층 간 상대적 취약성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육서비스의 질, 주관적 학업성취 혹은 학업성적 만족, 희망하는 교육수준, 학업중단(의사), 학교생활 만족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역시 포함한다. 비록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순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액의 사교육을 제외한 통상의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청소년 집단 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진단 방법

1) 상대적 비교

취약계층 청소년을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장애(가정) 청소년, 농촌 거주 청소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과 일반 청소년 간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육서비스의 질, 주관적 학업성취 혹은 학업성적 만족, 희망하는 교육수준, 학업중단(의사) 학교생활 만족 등을 비교한다. 특히, 집단 간 평균의 차이(t-test)를 분석하거나 개인의 속성을 통제하여 집단 간 관측 가능한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혹은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2) 시계열적 비교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교육부문에서 상대적 취약성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적 추세를 비교한다.

3. 진단 결과

1)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백만원 미만인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성적(학업성적은 상위(10%)이면 1, 중상위(11~30%)이면 2, 중위(31~60%)이면 3, 중하위(61~80%)이면 4, 하위(81~100%)이면 5로 측정)는 평균 3.48로 이는 중하위(61~80%)와 하위(81~100%)의 중간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 청소년의 평균은 3.15에 대하여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성향점수매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적은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난다.⁷⁾

표 III-1.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학업성적	부	3.48	3.15	0.33	13.47**
	여	3.48	3.12	0.36	4.91**
사교육 시간 (시간/주)	부	2.75	6.34	-3.59	-41.60**
	여	2.75	4.41	-1.66	-7.79**
사교육 금액 (만원/년)	부	120	407	-287	-48.74**
	여	120	256	-136	-10.20**

* 주: 1) 저소득가정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정의
 2) 학업성적은 상위(10%)이면 1, 중상위(11~30%)이면 2, 중위(31~60%)이면 3, 중하위(61~80%)이면 4, 하위(81~100%)이면 5로 측정
 3) 매칭을 위해 이항로짓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서 거주지역규모, 학교급, 학년, 성, 가구 내 총 자녀수, 가구 내 자녀들 가운데 출생순서,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 여부가 포함
 4)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1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에 있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은 2.75시간으로 일반 청소년의 6.34시간에 비해 3.59시간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사교육을 받지 못함을 전제로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적은 사교육 시간은 이들의 학업성취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욱 낮아지게 할 개연성이 있기

7) 성향점수의 추정을 위한 이항로짓모형 추정 결과는 부록의 <표 A8>에 제시되었다.

때문에 교육부분에서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사교육 금액에서도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 연간 120만원에 해당하여 일반 청소년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거주지역규모, 학교급, 학년, 성, 가구 내 총 자녀수, 가구 내 자녀들 가운데 출생순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 청소년들 가운데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과 유사한 경우로 한정하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사교육 금액은 일반 청소년의 대략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매우 못함'(1점) ... '매우 우수함'(5점)의 5점 척도로 정의)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14로 일반 청소년의 3.43에 비해 0.29만큼 낮으며, 이러한 상대적 취약성은 성,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규모, 가구소득이 유사한 일반 청소년만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표 III-2.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학업성취도	부	3.14	3.43	-0.29	-6.78
	여	3.14	3.39	-0.25	-2.18
사교육 경험 유무	부	0.24	0.56	-0.32	-15.94
	여	0.24	0.29	-0.05	-0.77
학원 또는 과외 시간	부	8.21	9.06	-0.85	-1.98
	여	8.21	7.68	0.53	0.66
희망 교육수준	부	0.79	0.93	-0.14	-13.61
	여	0.79	0.82	-0.03	-0.50

* 주: 1) 학업성취도는 '매우 못함'(1점) ... '매우 우수함'(5점)의 5점 척도로 정의
 2) 학원 또는 과외 시간은 1주일 총 시간으로 측정
 3) 희망 교육수준은 대졸(4년제) 이상의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
 4) 매칭을 위해 이항로짓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서 성,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규모, 가구소득이 포함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이 사교육을 경험할 확률은 24%로 일반 청소년의

56%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유사한 속성의 일반 청소년만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1주일 동안의 학원 또는 과외 시간에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평균은 8.21시간으로 일반 청소년(9.06시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희망 교육수준이 대졸(4년제) 이상일 확률에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평균 79%로 일반 청소년의 93%에 비해 14%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두 집단 간 속성이 유사한 청소년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집단 간 희망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II-3.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관련 취약성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행복감	부	6.73	7.13	-0.40	-6.86
	여	6.73	7.59	-0.85	-2.17
근심 혹은 걱정	부	3.80	3.35	0.45	5.13
	여	3.80	3.20	0.60	1.56
우울감	부	3.28	2.72	0.56	6.94
	여	3.28	2.67	0.61	1.77
삶의 만족도	부	6.33	6.71	-0.38	-6.10
	여	6.33	7.13	-0.80	-2.34
일에 대한 자부심	부	6.42	6.79	-0.37	-6.36
	여	6.42	7.22	-0.80	-2.44

* 주: 1) 행복감,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자부심은 0점에서 10점의 11점 척도이며, 보다 큰 수치가 보다 긍정적임(이름테면, 보다 행복함)을 의미
 2) 근심 혹은 걱정, 우울감은 0점에서 10점의 11점 척도이며, 보다 큰 수치가 보다 부정적임(이름테면, 보다 우울함)을 의미
 3) 매칭을 위해 이항로짓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서 성,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규모, 가구소득이 포함

교육 관련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취약성은 이들의 주관적 웰빙(Well-bein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행복감, 삶의 만족도,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근심 혹은 걱정과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관적 웰빙이 이들의 교육 관련 취약성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⁸⁾

(2)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통한 분석에서도 앞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대상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다. 주관적 학업성취에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하며,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에 지출하는 금액 모두에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두 집단 간 유사한 경우로 매칭하는 경우 사교육 시간과 금액에서 일반 청소년 대비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정도는 절반 수준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표 III-4.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학업성적	부	3.48	3.15	0.33	14.42
	여	3.48	3.12	0.36	6.13
사교육 시간 (시간/주)	부	3.67	6.29	-2.62	-31.94
	여	3.67	3.79	-0.12	-0.65
사교육 금액 (만원/년)	부	195	403	-208	-37.10
	여	195	219	-24	-2.00

* 주: 1) 학업성적은 상위(10%)이면 1, 중상위(11~30%)이면 2, 중위(31~60%)이면 3, 중하위(61~80%)이면 4, 하위(81~100%)이면 5로 측정
2) 매칭을 위해 이항로지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서 거주지역규모, 학교급, 학년, 성, 가구 내 총 자녀수, 가구 내 자녀들 가운데 출생순서, 가구소득이 포함

(3) 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8년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자녀의 학교 성적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7~12세 청소년 대상 학교 성적이 나빠진 경우의 비중은 12.8%에 해당하고 만13~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8.4%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들은 좋아진 경우의 해당 청소년 대상 비중인 7.8%(만 7~12세)와 11.1%(만13~18세)에 비해 높아 한부모 가정 내 청소년이 유사한 속성의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함축한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에 학교생활태도가 나빠진 경우의 비중이 만7~12세 청소년 대상 11.1%, 만13~18

8)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서 학업성취 혹은 교육 관련 요인들이 중요함을 다수의 연구결과가 제시한다.

세 청소년 대상 12.7%로 좋아진 경우에 대한 각각의 비중(12.7%와 14.1%)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5. 한부모 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학교 성적		학교생활태도	
	만7~12세	만13~18세	만7~12세	만13~18세
매우 나빠졌다	1.4	1.6	0.8	1.0
나빠진 편이다	11.4	16.8	10.3	11.7
변화가 없다	79.4	70.6	76.2	73.3
좋아진 편이다	7.0	10.0	11.3	12.2
매우 좋아졌다	0.8	1.1	1.4	1.9

3)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

(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5점 척도(“매우 못함”의 1점에서 “매우 우수함”의 5점으로 정의)에서 평균 3.36으로 일반 청소년의 매칭 전(3.42)과 후(3.62) 모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6.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학업성취도	부	3.36	3.42	-0.06	-2.25
	여	3.36	3.62	-0.26	-1.89
학원 또는 과외 시간	부	8.12	9.17	-1.05	-4.21
	여	8.12	7.48	0.64	0.66

* 주: 1) 학업성취도는 ‘매우 못함’(1점) … ‘매우 우수함’(5점)의 5점 척도로 정의
2) 학원 또는 과외 시간은 1주일 총 시간으로 측정
3) 매칭을 위해 이항로지트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서 성, 연령대, 학력, 가구소득, 가구형태가 포함

학원 또는 과외를 위한 시간은 1주일에 평균 8.12시간으로 매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의 9.17시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나, 성, 연령대, 학력, 가구소득,

가구형태 기준 유사한 일반 청소년으로 비교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에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취약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2)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교육 시간과 사교육 금액에서 대략 절반에서 2/3수준에 불과하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의 결과에 비해 그 취약성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관적 학업 성적은 거주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두 자료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가 관찰된다. 그럼에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교육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7.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교육 관련 취약성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학업성적	부	3.18	3.18	-0.006	-0.40
	여	3.18	3.08	0.10	1.35
사교육 시간 (시간/주)	부	4.32	6.55	-2.23	-39.75
	여	4.32	6.46	-2.14	-10.01
사교육 금액 (만원/년)	부	237	426	-189	-49.55
	여	237	477	-240	-15.66

* 주: 1) 학업성적은 상위(10%)이면 1, 중상위(11~30%)이면 2, 중위(31~60%)이면 3, 중하위(61~80%)이면 4, 하위(81~100%)이면 5로 측정
2) 매칭을 위해 이항로지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서 거주지역규모, 학교급, 학년, 성, 가구 내 총 자녀수, 가구 내 자녀들 가운데 출생순서, 한부모 혹은 조손가구 여부, 가구소득이 포함

4) 희망 교육수준

학업성취나 학습시간 등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관련 상대적 취약성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라면, 이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의 상대적 차이는 미래 시점에서의 취약성을 나타낼 것이다. 취약계층을 농산어촌 거주, 2백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구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각각으로 정의하는 경우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자료에서 해당 청소년이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희망하는 비중은 4.0%~5.8%

로, 일반 청소년의 해당 비중(8.1%~8.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더불어, 월평균 가구소득이나 가구형태에 의한 취약계층 청소년은 4년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일반 청소년의 해당 비중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8. 희망 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

희망 교육수준	거주지역규모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형태	
	농산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한부모/ 조손 가정	양부모가정
고졸 이하	3.9	3.4	12.4	3.1	10.3	2.6
전문대졸(2~3년제)	6.6	7.8	10.0	7.5	14.7	6.7
대졸(4년제)	83.8	80.5	73.1	81.4	71.0	82.3
대학원 이상	5.8	8.3	4.5	8.1	4.0	8.5

* 주: 해당 교육수준을 희망하는 비중(%)

한편,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경험에 있는 비중이 1.4%에 해당하여 일반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경험할 확률(0.7%)에 비해 두 배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나 가구형태에 의해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학업중단의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사례수는 많지 않으나, 학업중단 사유로는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내 특기를 살리려고’ 등으로 조사된다.

취약계층을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희망 교육수준의 차이를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간에는 대체로 희망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없으나 만9~12세와 비교하여 만13~18세의 경우 희망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역의 규모에 있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희망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해당 가구 내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은 일관되지 못하다. 1백만원 미만의 가구 내 청소년이 1~3백만원 미만의 가구 내 청소년에 비해 오히려 희망 교육수준이 높으나 3백만원 이상의 가구 내 청소년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더불어, 거주지역규모와 가구형태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희망 교육수준의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가구형태에 따른 희망 교육수준의 차이는 명확하며, 양부모 가족 내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내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9. 희망 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 : 순서형 로짓모형

	종속변수 : 희망 교육수준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2~3년제), 3 대졸(4년제), 4 대학원 이상)			
	(1)	(2)	(3)	(4)
여성	-0.120 (-1.64)	-0.122+ (-1.67)	-0.097 (-1.30)	-0.101 (-1.34)
만13~18세	0.458** (6.18)	0.437** (5.73)	0.358** (4.71)	0.423** (5.48)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089 (1.11)			0.215** (2.60)
농산어촌	-0.065 (-0.63)			0.048 (0.44)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 1백만원 미만)				
1~2백만원 미만		-1.119** (-3.11)		-2.036 (-1.45)
2~3백만원 미만		-1.249** (-3.73)		-0.888 (-0.64)
3~4백만원 미만		-0.309 (-1.04)		-0.505 (-0.37)
4~5백만원 미만		0.031 (0.11)		-0.234 (-0.17)
5~6백만원 미만		0.187 (0.64)		-0.085 (-0.06)
6백만원 이상		0.377 (1.28)		0.110 (0.08)
가구형태(기준 : 양부모 가족)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			-1.148** (-8.59)	-0.666** (-4.12)
그 외			0.295** (4.37)	1.826** (4.08)
관측수	4,861	4,861	4,676	4,676
Pseudo R-squared	0.0066	0.0250	0.0167	0.0269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5) 학교생활 만족도

(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학교가 학생들의 가정 밖 공간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학생들의 지적인 능력, 소속감, 사회적 유대를 함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만족이나 적응은 청소년의 사회화나 자아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Chin & Yu, 2008; Shaffer, 1999; Vieno, Santinello, Pastore, & Perkins, 2007)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경우 75.6%로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79.0%에 비해 낮다.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에게서 78.9%로, 이는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해당 수치(82.6%)에 비해 낮은 편이다. 선생님이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경우의 비중은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이 80.0%로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85.3%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III-10.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거주지역규모

학교생활 만족도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농산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전혀 그렇지 않다	2.1	0.9	1.9	0.7	1.4	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2.3	20.1	19.2	16.7	18.6	14.5
그런 편이다	68.8	71.0	64.7	65.8	71.8	75.0
매우 그렇다	6.8	8.0	14.2	16.8	8.2	10.3

가구형태에 의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답한 비중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70.7%로 일반 청소년의 해당 비중이 79.0%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에 있어, 일반 청소년의 82.4%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에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75.5%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여 학교에서의 면학

분위기에 있어서도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이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학교생활의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77.0%로 일반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85.0%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비록 주관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11.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가구형태

학교생활 만족도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한부모/ 조손 가정	양부모가정	한부모/ 조손 가정	양부모가정	한부모/ 조손 가정	양부모가정
전혀 그렇지 않다	2.9	1.0	1.1	0.9	0.1	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4	20.0	23.4	16.7	22.7	14.6
그런 편이다	64.8	71.0	61.9	65.8	67.8	74.9
매우 그렇다	5.9	8.0	13.6	16.6	9.2	10.1

(2) 한국사회조사 2020년

한국사회조사 2020년 자료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시설, 학교 주변 환경,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비교한다. 자료의 특성상 취약계층은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가구 내 장애인 존재 여부에 한해 정의될 수 있다.

먼저, 저소득 가구는 주택점유형태가 전세나 월세와 같은 차가이며 동시에 가구소득이 월평균 2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정의한다. 이러한 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학교생활 만족도에서의 차이는 일부 항목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청소년은 교우 관계에 있어 72.8%가 만족하는 반면에 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은 이보다 적은 66.7%만이 만족한다. 교사와의 관계 역시 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의 만족하는 비중은 57.9%로 일반 청소년의 64.6%에 비해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의 대략 절반인 51.6%가 만족하여 일반 청소년

의 해당 비중(59.4%)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다. 항목들 가운데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의 비중이 41.5%로 가장 낮으며, 이는 일반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절반 이하(47.9%)로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III-12.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저소득 가구

변수	일반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차이	t-값
교육 내용	56.6	50.9	5.7	1.38
교육 방법	47.9	41.5	6.4	1.55
교우 관계	72.8	66.7	6.1	1.66*
교사와의 관계	64.6	57.9	6.7	1.71*
학교 시설	54.4	54.7	-0.3	-0.08
학교 주변 환경	53.9	53.5	0.4	0.10
전반적인 학교생활	59.4	51.6	7.8	1.93*

* 주: 1) 저소득 가구는 주택점유형태가 차가(전세 혹은 월세)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2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정의
 2) 학교생활 만족도는 각 항목에 대해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은 1 혹은 2로 답한 경우의 비중에 해당
 3) *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하는 지역이 읍 혹은 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촌 거주 가구로 정의되며, 이러한 농촌 거주 가구 내 청소년을 취약계층으로 간주한다.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항목별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만족도가 일반 청소년의 그것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비중이 75.7%로 일반 청소년의 71.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이 55.8%로 일반 청소년의 59.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농촌 거주 가구 내 청소년의 경우 교육 내용이나 방법, 교우나 교사와의 관계, 학교 시설 혹은 주변 환경 이외에 다른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표 III-13.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농촌 거주 가구

변수	일반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차이	t-값
교육 내용	55.9	57.2	-1.3	-0.49
교육 방법	47.1	48.8	-1.7	-0.65
교우 관계	71.4	75.7	-4.3	-1.82*
교사와의 관계	64.1	64.0	0.1	0.04
학교 시설	54.3	54.7	-0.4	-0.16
학교 주변 환경	53.8	54.1	-0.3	-0.11
전반적인 학교생활	59.6	55.8	3.8	1.44

* 주: 1) 농촌 거주 가구는 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 정의

2) 학교생활 만족도는 각 항목에 대해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은 1 혹은 2로 답한 경우의 비중해 해당

3) *는 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가구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사람이 있는 가구 내 청소년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교육 관련 모든 항목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만족하는 비중이 일반 청소년의 만족하는 비중해 비해 낮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장애가구 내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만족도가 결코 높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4.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 장애가구

변수	일반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차이	t-값
교육 내용	56.3	54.1	2.2	0.56
교육 방법	47.8	43.5	4.3	1.06
교우 관계	72.8	67.1	5.7	1.60
교사와의 관계	64.4	60.6	3.8	1.00
학교 시설	54.6	52.4	2.2	0.56
학교 주변 환경	54.2	49.4	4.8	1.21
전반적인 학교생활	59.3	53.5	5.7	1.46

* 주: 1) 장애가구는 가구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로 정의

2) 학교생활 만족도는 각 항목에 대해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불만족한다', 5 '매우 불만족한다'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은 1 혹은 2로 답한 경우의 비중해 해당

6) 교육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는 2020년 1년 동안의 주요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액을 포함한다. 특히,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으로 정의되는 교육비를 포함하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등의 가구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가구의 소득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 혹은 저학력가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⁹⁾ 가구마스터자료와 별도로 제공되는 가구원자료를 이용해 가구 내 가구원의 연령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에 교육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교육비에서 보육료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은 초중고 자녀를 포함하되 영유아 혹은 미취학 자녀를 포함하지 않는 가구로 한정된다. 또한, 교육비 지출액의 규모 혹은 전체 소비지출액에서의 비중이 취약계층 청소년 여부와 더불어 거주지역, 가구주 특성, 가구원수, 초중고 자녀수, 대학(원)생 자녀수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한다.¹⁰⁾

먼저, 연간 교육비 지출액 규모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취약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 취약계층 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제시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연간 500만원만큼 적은 교육비를 지출하여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에 상관없이 여섯 가지 취약성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429만원만큼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¹¹⁾

9) 저소득가구는 10분위 소득구간에서 하위 1분위와 2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되며, 저학력가구는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로 정의된다.

10)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저소득가구, 저학력가구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가구는 분석에 포함된 10,713가구 가운데 20.2%에 해당하는 2,159가구이다. 이들의 자녀에 대한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550만원으로 일반 가구의 1,058만원과 비교해 52.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11) 통제변수들 가운데 수도권 거주 여부, 가구주의 성, 가구원수, 초중고 자녀수, 대학(원)생 자녀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며, 이들에 대한 추정 결과는 이론적 예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수도권에서의 보다 높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 혹은 사교육비로 인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 규모가 보다 크고, 생애주기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 가구주 가구에 있어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 규모가 보다 작다.

표 III-15. 연간 교육비 지출액 규모의 집단 간 차이

	(1)	(2)	(3)	(4)	(5)	(6)	(7)
수도권	287** (15.45)	285** (15.38)	283** (15.34)	287** (15.45)	287** (15.49)	289** (15.59)	271** (14.82)
여성	-330** (-13.59)	-202** (-7.62)	-331** (-13.59)	-326** (-13.44)	-309** (-12.81)	-314** (-12.87)	-131** (-5.38)
연령	1 (0.66)	1 (0.96)	-0 (-0.02)	-1 (-0.42)	3+ (1.76)	-0 (-0.16)	6** (4.44)
가구원수	112** (6.15)	94** (5.15)	125** (7.06)	130** (7.25)	119** (6.64)	102** (5.62)	100** (5.78)
초중고 자녀수	160** (7.06)	174** (7.66)	147** (6.62)	141** (6.27)	157** (6.95)	162** (7.18)	163** (7.42)
대학생 자녀수	282** (12.08)	286** (12.42)	272** (11.69)	281** (12.16)	272** (11.64)	291** (12.47)	267** (11.80)
조손	-461** (-8.66)						
한부모		-320** (-11.39)					
다문화			-500** (-15.61)				
장애				-230** (-7.36)			
저학력					-484** (-10.53)		
저소득						-419** (-13.03)	
취약계층							-429** (-19.98)
상수항	53 (0.70)	96 (1.31)	85 (1.15)	96 (1.30)	-48 (-0.59)	148* (2.00)	-92 (-1.22)
Adj. R ²	0.1117	0.1168	0.1190	0.1138	0.1144	0.1151	0.1376

* 주: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수는 10,713가구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함.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분석은 가중치가 적용됨.

한편, 취약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소비규모의 가구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교육비 지출액 대신에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출액으로 정의했을 경우와 적어도 정성적으로는 일관된 분석 결과가 나타난다. 즉, 취약계층 청소년 가구일수록 교육비 지출의 상대적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출액 규모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초중고 학령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문화가구에 있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출액 비중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조손가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 차이를 보인다.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교육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취약성의 유형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청소년 가구에 서 상대적으로 5.1%p만큼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16. 연간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집단 간 차이

	(1)	(2)	(3)	(4)	(5)	(6)	(7)
수도권	2.9** (11.30)	2.9** (11.25)	2.8** (11.18)	2.9** (11.35)	2.9** (11.34)	2.9** (11.48)	2.7** (10.66)
여성	-3.8** (-7.92)	-2.1** (-4.16)	-3.8** (-8.05)	-3.8** (-8.06)	-3.5** (-7.33)	-3.6** (-7.51)	-1.5** (-3.06)
연령	0.0 (1.26)	0.0 (1.03)	0.0 (0.19)	-0.0 (-0.33)	0.0* (2.03)	0.0 (0.07)	0.1** (3.61)
가구원수	-0.6* (-2.40)	-0.8** (-3.28)	-0.3 (-1.48)	-0.3 (-1.42)	-0.4+ (-1.80)	-0.7** (-2.83)	-0.6** (-2.86)
초중고 자녀수	3.3** (10.75)	3.5** (11.32)	3.1** (10.18)	3.1** (10.06)	3.2** (10.54)	3.3** (10.77)	3.3** (10.98)
대학생 자녀수	4.2** (13.68)	4.3** (14.16)	4.1** (13.34)	4.2** (13.79)	4.1** (13.18)	4.3** (14.13)	4.0** (13.34)
조손	-8.4** (-7.50)						
한부모		-4.2** (-7.62)					
다문화			-6.9** (-11.51)				
장애				-1.9** (-3.74)			
저학력					-7.1** (-8.80)		
저소득						-5.9** (-7.57)	
취약계층							-5.1** (-14.03)
상수항	14.4** (13.20)	15.3** (14.65)	15.1** (14.25)	15.5** (14.61)	13.2** (11.48)	16.0** (15.21)	13.1** (12.08)
Adj. R ²	0.0639	0.0672	0.0701	0.0621	0.0659	0.0662	0.0816

* 주: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수는 10,713가구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함.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분석은 가중치가 적용됨.

7) 시계열적 변화

(1)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증가하는 비례관계를 보인다.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가구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정 내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구소득 1~2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017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3.1점에서 2.9점으로 0.2점 낮아졌다.

표 III-17. 학업성취도의 시계열 변화

구분		학업성취도(5점 척도)		
		2017	2020	변화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2.9	3.1	0.2
	1~2백만원 미만	3.1	2.9	-0.2
	2~3백만원 미만	3.2	3.2	0.0
	3~4백만원 미만	3.4	3.3	-0.1
	4~5백만원 미만	3.4	3.4	0.0
	5~6백만원 미만	3.4	3.5	0.1
	6백만원 이상	3.5	3.5	0.0
주양육자 학력	초졸 이하	3.0	2.8	-0.2
	중졸	3.1	3.0	-0.1
	고졸	3.3	3.3	0.0
	대졸 이상	3.5	3.5	0.0
지역규모	대도시	3.4	3.5	0.1
	중소도시	3.3	3.4	0.1
	농산어촌	3.3	3.4	0.1

* 주: 학업성취도는 '매우 못함'(1점) ... '매우 우수함'(5점)의 5점 척도로 정의

주양육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비례관계를 보인다. 주양육자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 2017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3.0점에서 2.8점으로 0.2점 낮아졌고, 주양육자 학력이 중졸인 경우 2017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3.1점에서 3.0점으로 0.1점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주양육자 가정 내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최근에 오히려 낮아져 이들의 교육에서의 상대적 취약성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2017년과 2020년 모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7년에 3.3점 이었던 주관적 성취도가 2020년에 3.4점으로 상승하였다.

(2) 사교육 경험

사교육 경험에 대해 가구소득별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경험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가구인 저소득 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정 내 청소년보다 사교육 경험 비중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특히,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가구 내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2.7%, 2020년 39.5%로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구 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구소득 1~2백만원 미만 가구 내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2017년 50.5%에서 2020년 43.9%로 6.6%p 감소했다.

표 III-18. 사교육 경험 비중(%)의 시계열 변화

구분		사교육 경험 비중(%)		
		2017	2020	변화(%p)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32.7	39.5	6.8
	1~2백만원 미만	50.5	43.9	-6.6
	2~3백만원 미만	71.0	55.9	-15.1
	3~4백만원 미만	84.6	75.6	-9.0
	4~5백만원 미만	87.2	80.4	-6.8
	5~6백만원 미만	89.4	76.1	-13.3
	6백만원 이상	91.0	85.6	-5.4
주양육자 학력	초졸 이하	30.6	35.7	5.1
	중졸	58.6	40.6	-18.0
	고졸	78.2	73.9	-4.3
	대졸 이상	88.8	80.3	-8.5
지역규모	대도시	86.5	83.0	-3.5
	중소도시	83.6	76.6	-7.0
	농산어촌	72.9	69.6	-3.3

주양육자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교육 경험 비중도 높은 비례관계를 보인다. 주양육자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와 고졸 이상인 경우 간 해당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 비중에서의 차이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 자녀의 사교육 경험 비중이 2017년 30.6%, 2020년 35.7%로, 고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지닌 주양육자 자녀의 해당 비중이 2017년과 2020년 모두 7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에 비해 2020년 사교육 경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주양육자 학력이 중졸인 자녀의 경우 2017년 58.6%에서 2020년 40.6%로 18.0%p 감소했는데 이는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감소임을 알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사교육 경험 비중은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사교육 경험 비중보다 낮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사교육 경험 비중은 2017년 72.9%에서 2020년 69.6%로 3.3%p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교육 시간(1주일 동안의 총 사교육 시간)은 세부 집단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인다. 거주지역이 동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015년 8.4시간에서 2018년 9.1시간으로 0.7시간만큼 증가한 반면에 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동기간 7.5시간에서 8.6시간으로 1.1시간만큼 증가하여 거주지역 간 차이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9.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주일 총 사교육 시간의 시계열 변화

구분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주일 총 사교육 시간		
		2015	2018	변화
지역규모	동부	8.4	9.1	0.7
	읍면부	7.5	8.6	1.1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7.8	7.7	-0.1
	1~2백만원 미만	7.5	8.9	1.4
	2~3백만원 미만	7.9	8.5	0.6
	3~4백만원 미만	8.3	9.0	0.7
	4~5백만원 미만	9.0	9.4	0.5
	5백만원 이상	9.2	9.4	0.2

* 주: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에 해당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시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1~2백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녀의 사교육 시간이 1주일에 평균 7.5시간

으로 가장 낮았으나 2018년에는 8.9시간으로 두 시점 간 가장 큰 폭(1.4시간)의 증가를 나타낸다. 가구소득수준에 의한 집단 간 사교육 시간의 최대 격차가 2015년에 1.7시간이었으며, 이러한 격차는 2018년에도 지속되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간에도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에서 지속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3) 학업중단

가구소득별 학업 중단 경험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가구인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정 내 청소년보다 학업 중단을 경험한 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과 1~2백만원 미만 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은 각각 2.9%와 6.4%인데, 이는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정 내 청소년의 해당 비중이 0.1%~1.5%인 것과 비교했을 때 명백하게 높은 비중에 해당한다.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가구소득이 1~2백만원 미만인 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은 6.4%p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에 가구소득이 2~3백만원 미만인 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 해당 비중이 0.7%에서 2.1%로 1.4%p만큼 상승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다.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에 의해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2017년에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양육자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와 중졸인 경우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은 각각 8.5%와 1.2%인데, 이는 주양육자 학력이 고졸인 경우 0.8%, 대졸 이상인 경우 0.6%인 것에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2020년의 경우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중졸이거나 초졸 이하인 경우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이 급락하여 고졸 혹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주양육자의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지역규모별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경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 농산어촌 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은 시계열적으로 2017년 0.9%에서 2020년 1.1%로 0.2%p 증가하여, 대도시 거주 청소년의 해당 비중에서 변화가 없고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해당 비중이 하락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표 III-20. 학업 중단 경험의 시계열 변화

구분		학업 중단 경험(%)		
		2017	2020	변화(%p)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2.9	2.9	0.0
	1~2백만원 미만	6.4	0.0	-6.4
	2~3백만원 미만	0.7	2.1	1.4
	3~4백만원 미만	0.5	0.9	0.4
	4~5백만원 미만	0.6	0.5	-0.1
	5~6백만원 미만	0.1	0.5	0.4
	6백만원 이상	1.5	1.1	-0.4
주양육자 학력	초졸 이하	8.5	0.0	-8.5
	중졸	1.2	0.0	-1.2
	고졸	0.8	0.8	0.0
	대졸 이상	0.6	0.7	0.1
지역규모	대도시	0.7	0.7	0.0
	중소도시	1.0	0.7	-0.3
	농산어촌	0.9	1.1	0.2

* 주: 학업 중단 경험이 있음의 비중(%)에 해당

가구 경제 수준별 청소년 학업 중단 생각 여부를 살펴보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수록 학업 중단 충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상중하 가운데 가장 낮은 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충동을 경험한 비중이 2016년 26.5%에서 2017년 28.6%로 2.1%p 증가했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의 청소년이 학업 중단 충동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학업 중단 생각 여부 비중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0.3%p 증가한 반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1.1%p, 조손 가정 청소년의 경우 2.5%p로 훨씬 큰 증가폭을 나타낸다. 양부모 가정 내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 중단 생각에 대한 비중이 2013~2017년의 기간에서 2015년을 제외하고 줄곧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지역규모별 청소년 학업 중단 생각 여부를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학업 중단 충동을 느끼는 경우의 비중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4.0%p 감소했지만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의 경우 0.1%p 증가하고,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경우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4년 이전에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이 농산어촌 혹은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 높은 학업 중단 충동 비중을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이 추세가 반전되어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보다 높은 학업 중단 충동 비중을 보인다.

표 Ⅲ-21. 학업 중단 생각 여부의 시계열 변화

구분		학업 중단 생각 여부(%)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구 경제적 수준	상	20.9	27.3	26.1	22.8	24.3
	중	22.2	27.9	26.1	26.7	25.4
	하	26.4	28.3	25.8	26.5	28.6
가족 유형	양부모 가정	21.4	27.2	25.5	24.3	24.6
	한부모 가정	27.6	35.1	31.2	33.6	34.7
	조손 가정	29.8	37.4	24.4	27.8	30.3
지역규모	대도시	23.4	30.7	27.9	26.4	22.4
	중소도시	20.2	23.1	20.3	20.9	21.0
	농산어촌	21.1	27.4	28.5	26.1	27.8

* 주: 학업 중단 충동이 있었음에 해당하는 비중(%)에 해당

조만간 학업 중단 예정인 청소년 비중의 변화를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의 청소년에게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정 비중은 2013년 1.3%에서 2018년 3.0%로 1.7%p 증가했는데,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정 비중이 2013년에 비해 2018년 0.7%p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폭의 증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2. 학업 중단 의사(중단 예정)의 시계열 변화

구분		학업 중단 의사(중단 예정)(%)		
		2013	2018	변화
가족 유형	양부모	0.5	1.2	0.7
	한부모, 조손 가정	1.3	3.0	1.7
지역규모	대도시	1.2	1.6	0.4
	중소도시	0.2	1.0	0.8
	농산어촌	0.0	1.3	1.3

* 주: 조만간 학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거나 예정인 경우의 비중(%)에 해당

청소년의 거주지역 규모별 학업 중단 예정 비중을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예정 비중이 2013년과 2018년에 객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변화치를 살펴보면 대도시 청소년과 중소도시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정 비중의 변화가 각각 0.4%p와 0.8%p인 것에 비교했을 때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정 비중이 2013년 0.0%에서 2018년 1.3%로 1.3%p의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전체적으로 부적응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2015년 0.7%에서 2018년 2.3%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1.6%p만큼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지역에서의 변화-1.6%에서 2.6%로 1.0%p 증가-와 차이를 보인다. 비록 2018년에도 동지역에 비해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시계열적으로는 읍지역이나 면지역에서 보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낸다.

표 III-2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정도의 시계열 변화

구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정도(%)		
		2015	2018	변화
지역규모	동부	1.6	2.6	1.0
	읍면부	0.7	2.3	1.6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3.2	3.9	0.7
	1~2백만원 미만	1.7	2.0	0.3
	2~3백만원 미만	1.3	3.0	1.7
	3~4백만원 미만	1.1	2.9	1.8
	4~5백만원 미만	0.8	2.1	1.3
	5백만원 이상	0.2	1.5	1.3

* 주: '잘 적응하지 못한다' 비중(%)과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비중(%)의 합에 해당

2015년의 경우 가구소득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 비중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1백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다문화가정 내 자녀가 여전히 가장 높은 학교 부적응 비중을 나타내지만, 2~4백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는 다문화가정 내 자녀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교 부적응 비중을 보인다. 2015년과 2018년 사이 변화에서 가구소득 2~4백만원 미만 다문화가정 내 자녀

의 학교 부적응 비중이 다른 가구소득 집단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통념적으로 저소득가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나,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최근에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학교에 대한 적응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4) 희망 교육수준

가족 유형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양부모 가정 청소년은 92.2%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에 비해 한부모, 조손 가정 청소년은 74.6%만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3년에 비해 2018년 양부모 가정 청소년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2.4%p 증가했지만 한부모, 조손 가정 청소년은 아무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희망 교육수준은 최근에 보다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반드시 취약성의 극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이 보다 높은 인적자원을 나타내고 통상 보다 많은 생애소득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소년이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여건의 조성 혹은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따른 희망 교육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2013년 대비 2018년의 수준을 비교하면, 대도시 거주 청소년의 경우 4.2%p만큼 상승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각각 2.2%p와 2.4%p 상승과 대조를 이룬다.

표 III-24. 희망 교육수준의 시계열 변화

구분		희망 교육수준(%)		
		2013	2018	변화
가족 유형	양부모	89.8	92.2	2.4
	한부모, 조손 가정	74.6	74.6	0.0
지역규모	대도시	88.2	92.4	4.2
	중소도시	87.2	89.4	2.2
	농산어촌	89.1	91.5	2.4

* 주: 희망 교육수준은 대학(4년제) 졸업 혹은 그 이상의 비중(%)에 해당

2017년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희망 교육수준이 하락하나 3~4백만원 미만의 가구소득부터는 상승하는 비선형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III-25. 희망 교육수준의 시계열 변화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구분		희망 교육수준(%) (대졸(4년제) 이상의 비중)		
		2017	2020	변화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57.6	90.7	33.1
	1~2백만원 미만	67.0	71.9	4.9
	2~3백만원 미만	72.8	67.9	-4.9
	3~4백만원 미만	86.6	86.8	0.2
	4~5백만원 미만	88.5	89.4	0.9
	5~6백만원 미만	91.7	89.8	-1.9
	6백만원 이상	91.6	92.8	1.2
주양육자 학력	초졸 이하	68.0	44.5	-23.5
	중졸	57.5	60.0	2.5
	고졸	83.7	83.9	0.2
	대졸 이상	91.8	93.8	2.0
지역규모	대도시	89.4	87.8	-1.6
	중소도시	86.2	88.3	2.1
	농산어촌	77.6	89.6	12.0

* 주: 희망 교육수준은 대학(4년제) 졸업 혹은 그 이상의 비중(%)에 해당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이 2020년에 관측되었으나 이는 2017년의 관계와 상당히 상이하다. 주양육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두 시점 간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비중이 68.0%에서 44.5%로 23.5%p의 하락을 나타낸다. 2020년 기준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와 초졸 이하인 경우 간 청소년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비중의 차이는 49.3%p에 달한다. 이는 세대 간 학력수준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축한다.

지역규모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읍면부에 거주 중인 청소년이 동부에 거주 중인 청소년보다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다문화가정 자녀의 4년제 대학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을 살펴보

면,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2백만원 미만 가구소득 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 2015년 60.1%에서 2018년 58.4%로 1.7%p 감소하였다.

표 Ⅲ-26. 다문화가정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의 시계열 변화

구분		다문화가정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		
		2015	2018	변화
지역규모	동부	65.4	66.5	1.1
	읍면부	59.4	63.6	4.2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62.3	65.2	2.9
	1~2백만원 미만	60.1	58.4	-1.7
	2~3백만원 미만	63.5	61.7	-1.8
	3~4백만원 미만	63.0	70.3	7.3
	4~5백만원 미만	67.1	67.8	0.7
	5백만원 이상	71.5	70.3	-1.2

* 주: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비중(%)에 해당

(5) 학교생활 만족도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시계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까지는 읍지역이나 면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동지역 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높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동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읍지역이나 면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04년에 비해 2008년 이후 16.6%p 증가했지만, 읍지역이나 면지역 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12.1%p의 증가에 그쳤다.

표 Ⅲ-27.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의 시계열 변화

구분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2000	2004	2008 이후
지역규모	동부	8.4	9.1	25.7
	읍면부	8.7	10.3	22.4

* 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에 해당

4. 소결

1) 진단 기준과 방법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진단은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여건과 현황의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의 학습여건, 학업성취, 학교생활 만족도 등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기 어려우며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 간 평균의 차이(t-test)를 분석하거나 개인의 속성을 통제하여 집단 간 관측 가능한 이질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혹은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교육 관련 청소년의 계층 간 상대적 취약성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육서비스의 질, 주관적 학업성취 혹은 학업성적 만족, 희망하는 교육수준, 학업중단(의사), 학교생활 만족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역시 포함한다. 비록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순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액의 사교육을 제외한 통상의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청소년 집단 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진단 결과

학업성취에 있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이 대체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5점 척도(1점 ‘매우 못함’ … 5점 ‘매우 우수함’)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학업성취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 역시 증가하는 비례관계를 보인다.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가구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정 내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구소득 1~2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017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3.1점에서 2.9점으로 0.2점 낮아졌다.

학원 또는 과외와 같은 사교육의 경험·시간·금액에 있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사교육 경험에 대해 가구소득별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경험 비중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가구인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정 내 청소년보다 사교육 경험 비중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연간 교육비 지출액 규모의 집단 간 차이는 취약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 취약계층 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제시한다. 유형별로는 다문화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연간 500만원만 큼 적은 교육비를 지출하여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형에 상관없이 여섯 가지 취약성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비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429만원만 큼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희망하는 교육수준에서, 양부모 가족 내 청소년에 비해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내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소득별 학업 중단 경험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가구인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 가구소득 2백만원 이상 가정 내 청소년보다 학업 중단을 경험한 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에 의해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2017년에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학업 중단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양육자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와 중졸인 경우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경험 비중은 각각 8.5%와 1.2%인데, 이는 주양육자 학력이 고졸인 경우 0.8%, 대졸 이상인 경우 0.6%인 것에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의 청소년이 학업 중단 충동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학업 중단 생각 여부 비중은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0.3%p 증가한 반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경우 1.1%p, 조손 가정 청소년의 경우 2.5%p로 훨씬 큰 증가폭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대략 절반인 51.6%가 만족하여 일반 청소년의 해당 비중(59.4%)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다. 항목들 가운데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의 비중이 41.5%로 가장 낮으며, 이는 일반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절반 이하(47.9%)로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시계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까지는 읍지역이나 면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동지역 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높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동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읍지역이나 면지역 거주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 제4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 1.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
- 2. 정책(사업)의 이용 혹은
수혜와 만족도
- 3. 정책(사업)의 효과
- 4. 소결

1.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

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

(1)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청소년정책 사업 가운데,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각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의 비중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정책에 대해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35.4%가 인지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31.1%만 인지한다.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들 가운데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하는 비중은 각각 39.6%와 35.5%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각각 6.5%p와 7.0%p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부	35.4	31.1	4.3	2.27
	여	35.4	23.1	12.3	1.81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	부	39.6	33.1	6.5	3.37
	여	39.6	33.5	6.1	0.8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	35.5	28.5	7.0	3.83
	여	35.5	28.4	7.1	1.04

* 주: 1)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는 '모른다'와 '알고 있다'의 형태로 조사됨

2) 매칭을 위해 이항로지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규모, 가구소득이 포함됨

하지만,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규모, 가구소득으로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매칭하여 속성이 유사한 청소년들로 분석을 한정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정책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거주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산어촌으로 구분하고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를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경우,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정책에 한해 취약계층 청소년(33.8%)이 일반 청소년(30.8%)에 비해 인지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의 정도는 농산어촌 거주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V-2.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부	33.8	30.8	3.0	1.95
	여	33.8	18.2	15.6	1.82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	부	32.8	33.6	-0.8	-0.51
	여	32.8	16.5	16.3	1.9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	31.2	28.5	2.7	1.81
	여	31.2	19.9	11.3	1.34

* 주: 1)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는 '모른다'와 '알고 있다'의 형태로 조사됨
 2) 매칭을 위해 이항로지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 성별, 연령대, 가구소득, 가구형태가 포함됨

(3)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2백만원 미만인 가구 내 청소년을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있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31.3%인 반면에 후자는 30.8%에 해당하며, 매칭 이후에는 일반 청소년에 있어 인지의 정도가 36.3%에 해당하여 취약계층 청소년과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낸다. 다만, 이러한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인지의 정도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청소년에 있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3.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변수	매칭 여부	취약계층	일반 청소년	차이	t-값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부	30.8	31.3	-0.5	-0.11
	여	30.8	36.3	-5.5	-0.62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	부	41.7	33.4	8.3	1.68
	여	41.7	25.2	16.5	1.9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	35.1	28.7	6.4	1.34
	여	35.1	26.3	8.8	1.04

* 주: 1)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는 '모른다'와 '알고 있다'의 형태로 조사됨
 2) 저소득가정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정의됨
 3) 매칭을 위해 이항로짓모형이 적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규모, 가구형태가 포함됨

2) 방과 후 시설(서비스)

(1) 청소년 교육 공정 인식 및 실태조사¹²⁾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89.8%가 방과후학교에 대해 알고 있으며, 다녀본 적도 있는 경우는 68.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87.4%이며, 실제로 다녀본 적도 있는 학생은 48.2%에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알고 있는 학생은 88.8%이며, 77.5%가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단지 52.7%만이 인지하고 있고, 이용경험의 비중도 34.0%로 낮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 비율은 각각 31.8%와 7.9%로 조사대상 방과 후 시설(서비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12)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해 2022년에 실시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1,034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령기별로는 초등학교생 646명(62.5%), 중학생 326명(31.5%), 고등학생 62명(6.0%)에 해당하고, 성별로는 남학생 524명(50.7%), 여학생 510명(49.3%)에 해당한다.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나 학업성적이 본인이 속한 학급을 기준으로 못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5.1%에 해당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정은 17.9%에 해당하고,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서 장애가 있는 경우의 비중은 6.3%에 해당한다.

표 IV-4. 방과 후 시설(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비중

방과 후 시설(서비스)	구분	비중(%)
방과후학교 (n=1,007)	어떤 곳인지 모른다	10.2
	어떤 곳인지 알지만 다녀본 적 없다	21.2
	어떤 곳인지 알고 다녀본 적 있다	68.6
초등돌봄교실 (n=1,001)	어떤 곳인지 모른다	12.6
	어떤 곳인지 알지만 다녀본 적 없다	39.3
	어떤 곳인지 알고 다녀본 적 있다	48.2
지역아동센터 (n=1,012)	어떤 곳인지 모른다	11.2
	어떤 곳인지 알지만 다녀본 적 없다	11.4
	어떤 곳인지 알고 다녀본 적 있다	77.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n=988)	어떤 곳인지 모른다	47.3
	어떤 곳인지 알지만 다녀본 적 없다	18.7
	어떤 곳인지 알고 다녀본 적 있다	34.0
다함께돌봄센터 (n=993)	어떤 곳인지 모른다	68.2
	어떤 곳인지 알지만 다녀본 적 없다	24.0
	어떤 곳인지 알고 다녀본 적 있다	7.9

한편, 이러한 방과 후 시설(서비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은 93.0%로 매우 높다.

2. 정책(사업)의 이용 혹은 수혜와 만족도

1)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의 유무와 이러한 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2기 패널)에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었다.¹³⁾ 자녀의 한국어교육 관련 지원을 수혜한 비중은 29.3%이며, 이들 가운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경우는 83.0%에 해당한다. 하지만,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수혜의 비중이 다르며,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23.4%인데 반해 읍/면 거주자의 경우 34.1%로 높다.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관련 지원을 수혜한 경우는 14.2%이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24.1%로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에 비해 두 배 가량 높다. 도움의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73.0%에 해당하나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인다.

표 IV-5.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한국어, 이중언어

구분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수혜(%)	F-값	도움(%)	F-값	수혜(%)	F-값	도움(%)	F-값
전체		29.3		83.0		14.2		73.0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3.4	8.91**	84.5	0.25	12.0	14.7**	63.5	2.84+
	중소도시	31.4		82.1		12.9		78.0	
	읍/면	34.1		84.0		24.1		72.9	

* 주: **와 +는 각각 1%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교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관련 지원의 수혜비중은 27.7%에 해당하며, 읍/면 거주자의 경우에 36.4%가 수혜하여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에 비해 10%p가량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수혜자들 가운데 84.1%가 도움의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특히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보다 높은 긍정적 도움의 비중을 보인다. 무료 방문학습지 지원을 수혜한 비중은 25.0%로 거주지역규모 기준 대도시(19.2%), 중소도시(25.3%), 읍/면(36.7%)의 순으로 수혜의 비중이 높다. 긍정적인 도움을 나타낸 비중은 80.1%에 해당한다.

13) 지원은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도움의 정도는 '전혀 도움 안 된다'(1점) ... '매우 도움 된다'(5점)와 같이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표 IV-6.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학습지도, 방문학습지

구분		교과목 학습지도				무료 방문학습지			
		수혜(%)	F-값	도움(%)	F-값	수혜(%)	F-값	도움(%)	F-값
전체		27.7		84.1		25.0		80.1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26.6	6.81**	78.2	6.92**	19.2	17.7**	79.3	1.80
	중소도시	26.2		89.4		25.3		82.6	
	읍/면	36.4		78.4		36.7		74.1	

* 주: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의 특기적성 교육 관련 지원을 수혜한 경우는 20.9%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거주지역일수록 높은 수혜비중을 나타낸다. 도움의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85.7%이며, 거주지역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지 않다. 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을 포함하는 현금지원을 수혜한 경우는 11.2%이며, 읍/면(17.4%)에서 가장 높고 대도시(8.7%)에서 가장 낮다. 현금지원의 도움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87.8%로 낮은 수혜비중과 대조된다.

표 IV-7.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특기적성, 현금지원

구분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현금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수혜(%)	F-값	도움(%)	F-값	수혜(%)	F-값	도움(%)	F-값
전체		20.9		85.7		11.2		87.8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7.0	4.69**	85.3	0.29	8.7	8.20**	89.1	0.68
	중소도시	22.5		85.1		11.0		89.1	
	읍/면	23.3		88.6		17.4		83.0	

* 주: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책이나 학용품 등의 물품지원을 포함하는 물적지원을 받은 경우의 비중은 16.2%이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중이 25.7%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12.8%)의 두 배에 달한다. 물적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의 비중은 84.7%로, 대도시에서 이러한 긍정적 도움의 비중(76.4%)이 가장 낮다. 진로(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관련 상담, 체험활동, 캠프 등의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의 수혜비중은

10.1%에 불과하며, 특히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 5.7%로 가장 낮다. 그럼에도 수혜자 가운데 88.3%가 긍정적 도움을 나타내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92.1%로 특히 높은 도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표 IV-8.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교육 관련 서비스 수혜 비중과 도움 비중 : 물질지원, 진로 프로그램

구분		물질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지원)				진로 프로그램(상담, 체험활동, 캠프 등)			
		수혜(%)	F-값	도움(%)	F-값	수혜(%)	F-값	도움(%)	F-값
전체		16.2		84.7		10.1		88.3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2.8	13.4**	76.4	4.32*	5.7	10.6**	73.8	5.18**
	중소도시	15.8		89.3		11.8		92.1	
	읍/면	25.7		82.6		12.9		88.9	

* 주: **와 *는 각각 1%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학업중단 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이용 경험

(1)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2016년(4차 패널), 2017년(5차 패널)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2016년 자료에 포함된 427명의 표본 가운데 120명(28.1%)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들 120명 가운데 50명이 꿈드림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꿈드림센터를 통해 받고 싶은 서비스는 진로상담(19.9%), 문화예술·스포츠 등 관심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18.4%), 취업지원(17.0%), 경제적 지원(15.6%), 심리상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학업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단지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학업중단 이후 필요했던 지원 역시 경제적 지원(25.5%), 진로상담(19.2%), 학업중단 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14.1%) 등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반면에 학업지원은 단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꿈드림센터의 기능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사업)의 효과

1)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를 통한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효과의 평가는 통상 이중차분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

$$dy_j = \alpha + \beta_1 treat_j + X_j \gamma + \epsilon_j$$

종속변수인 dy_j 는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j 의 지원수혜 전후 학업성취의 변화-즉, 지원수혜 이후의 학업성취에서 지원수혜 이전의 학업성취를 뺀 수치-를 나타낸다. $treat_j$ 은 지원의 수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의 계수인 β_1 을 통해 지원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성취 효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한다. X_j 는 해당 청소년 개인, 부모 혹은 가구의 특성들을 포함하는 매트릭스(matrix)이고,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에 해당한다.

실증분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며, 종속변수는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각에 대한 5점 척도의 주관적 성적을 더한 것으로 정의된다.¹⁴⁾ 분석 대상 지원정책은 특정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를 실험집단으로 그리고 후자를 대조집단으로 간주한다.¹⁵⁾ 연속적인 두 연도의 자료에 대해 분석하며, 두 연도 모두 지원을 받았거나 처음 연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해당 청소년 혹은 가구나 부모의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과 연령, 거주지역(권역과 규모),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수준, 부모 가운데 외국인의 한국 내 거주기간과 한국어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회귀분석에 설명변수로 포함된다.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각각에

14) 5점 척도는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 '못하는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잘하는 편이다'(4점), '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로 정의된다.

15) 해당 조사는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 학습지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지원사업들의 수혜 여부를 묻는 추가적인 문항을 포함하나 이들에 대한 개별적 수혜 여부는 다수의 결측치를 포함하여 분석은 전체적인 수혜 여부에 한정된다.

대해 4점 척도(1점 : '전혀 못함', 2점 : '못하는 편', 3점 : '잘하는 편', 4점 : '매우 잘함')로 조사된 능숙도를 모두 더한 수치로 정의된다.

[그림 IV-1]은 연차별 교육 관련 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별 학업성취를 나타낸다. 2차년도인 2012년부터 7차년도인 2017년까지는 지원을 수혜한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다가 8차년도인 2018년에는 오히려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보다 높았으며 9차년도인 2019년에는 다시 지원을 수혜한 청소년에게서 보다 높은 학업성취가 관찰된다. 2012년에 지원을 수혜한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17.18로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의 16.82에 비해 0.36만큼 높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2017년까지 0.10에서 0.42까지의 범위 내에서 변화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지원을 수혜한 청소년이 12.47로 응답한 반면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은 13.20으로 지원을 수혜한 청소년에 비해 0.73만큼 오히려 높았다. 1기의 마지막 조사 시점인 2019년에는 다시 지원을 수혜한 청소년이 13.12로 0.54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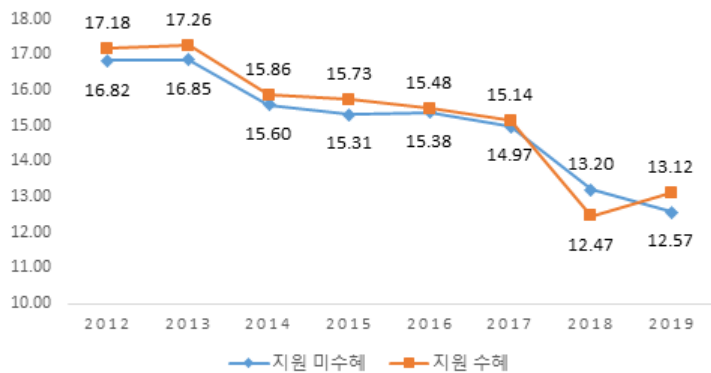


그림 IV-1. 연차별 교육 관련 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별 학업성취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1기와 2기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2011~2019년에 걸쳐 매년 조사된 1기 조사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2기 조사는 한 연도(2019년)의 조사 결과만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더불어, 1기 조사의 경우에도 1차년도는 다문화 관련 정책지원의 수혜 여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차년도 조사자료 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표 IV-9.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2-3차 조사

	(1)	(2)	(3)
실험집단	0.587+ (1.79)	0.466 (1.40)	0.464 (1.34)
여성	-0.327 (-1.09)	-0.339 (-1.09)	-0.316 (-0.98)
연령	0.266 (0.70)	0.341 (0.83)	0.321 (0.74)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938* (-1.98)	-0.987* (-2.07)	-0.854+ (-1.75)
읍/면	-1.073* (-2.12)	-0.939+ (-1.82)	-0.838 (-1.60)
어머니 연령		-0.019 (-0.70)	-0.017 (-0.60)
어머니 학력수준(기준 : 중졸 이하)			
고졸		0.287 (0.73)	0.347 (0.87)
대학(2~3년제) 졸업		0.927 (1.47)	1.081 (1.57)
대학(4년제 이상) 졸업		0.964+ (1.70)	1.416* (2.26)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0.881 (-0.91)	-0.766 (-0.49)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년)			0.045 (0.83)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014 (-0.18)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2 (-0.99)
상수항	-1.823 (-0.44)	-1.697 (-0.35)	-1.914 (-0.36)
관측수	439	422	402
Adj. R-squared	0.0241	0.0295	0.0167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IV-9〉는 2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차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집단은 3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경우로 정의되며, 439명 가운데 41.7%가 이에 해당한다. 열 (1)은 청소년 개인의 속성만을 통제하는 반면에 열 (2)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수준을 그리고 마지막 열은 부모 가운데 외국인의 한국 거주기간 및 한국어 수준과 가구소득을 추가로 통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열 (1)에서만 지원의 수혜가 해당 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업성취의 변화에 있어,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고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어머니가 대학(4년제 이상) 졸업의 학력을 지닌 경우에 보다 높은 학업성취 증가를 보인다.

표 IV-10.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3-4차 조사

	(1)	(2)	(3)
실험집단	-0.256 (-0.81)	-0.432 (-1.33)	-0.301 (-0.87)
여성	0.239 (0.89)	0.253 (0.90)	0.286 (0.99)
연령	-0.634+ (-1.80)	-0.770* (-2.13)	-0.740* (-2.02)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622+ (-1.81)	-0.619+ (-1.72)	-0.646+ (-1.74)
읍/면	-0.324 (-0.74)	-0.223 (-0.50)	-0.458 (-1.03)
어머니 연령		0.056+ (1.77)	0.019 (0.55)
어머니 학력수준(기준 : 중졸 이하) 고졸		0.309 (0.96)	0.283 (0.87)
대학(2~3년제) 졸업		0.373 (0.66)	0.354 (0.61)
대학(4년제 이상) 졸업		1.127+ (1.91)	0.958 (1.47)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1.799 (0.98)	1.679 (0.81)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년)			0.086+ (1.89)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103 (-1.51)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1 (0.73)
상수항	5.898 (1.39)	4.382 (0.93)	5.490 (1.12)
관측수	615	587	562
Adj. R-squared	0.0080	0.0146	0.0153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IV-10〉은 3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들 가운데 4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경우가 실험집단으로 정의된다. 615명의 표본 가운데 24.1%가 실험집단에 해당한다. 모든 열에서 실험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뿐더러 부호가 음(-)의 값을 가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의 연령이 낮거나 대도시에 거주하거나(중소도시 거주 대비) 부모 가운데 외국인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업성취의 개선이 보다 크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4-5차 조사

	(1)	(2)	(3)
실험집단	0.373 (1.54)	0.413+ (1.68)	0.508* (2.02)
여성	0.192 (1.00)	0.190 (0.96)	0.232 (1.15)
연령	-0.027 (-0.10)	0.036 (0.13)	0.095 (0.33)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403 (-1.40)	-0.472 (-1.57)	-0.489 (-1.58)
읍/면	0.089 (0.28)	-0.012 (-0.04)	0.107 (0.31)
어머니 연령		-0.000 (-0.01)	-0.000 (-0.01)
어머니 학력수준(기준 : 중졸 이하)			
고졸		0.042 (0.18)	-0.067 (-0.29)
대학(2~3년제) 졸업		-0.399 (-0.89)	-0.304 (-0.66)
대학(4년제 이상) 졸업		0.089 (0.23)	-0.223 (-0.53)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0.320 (-0.32)	-0.280 (-0.26)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년)			-0.027 (-0.87)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042 (-0.84)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2+ (1.84)
상수항	-0.527 (-0.16)	-1.216 (-0.33)	-1.343 (-0.33)
관측수	911	875	834
Adj. R-squared	0.0124	0.0078	0.0119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IV-11>은 4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들 가운데 5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경우가 실험집단으로 정의된다. 911명의 표본 가운데 22.0%에 해당하는 200명이 5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였다. 청소년의 속성만을 통제한 열 (1)에서는 지원 수혜의 학업성취 개선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나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수준을 추가로 통제한 열 (2)에서는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부모 가운데 외국인의 한국 거주기간 및 한국어 수준과 가구소득을 추가로 통제한 마지막 열에서는 지원정책의 수혜가 해당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5-6차 조사

	(1)	(2)	(3)
실험집단	-0.259 (-0.96)	-0.273 (-0.99)	-0.271 (-0.98)
여성	-0.095 (-0.51)	-0.062 (-0.33)	-0.007 (-0.04)
연령	-0.480+ (-1.65)	-0.600+ (-1.93)	-0.630* (-2.04)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280 (-1.00)	-0.317 (-1.08)	-0.324 (-1.07)
읍/면	-0.448 (-1.32)	-0.453 (-1.31)	-0.638+ (-1.81)
어머니 연령		0.007 (0.29)	0.007 (0.29)
어머니 학력수준(기준 : 중졸 이하) 고졸		-0.288 (-1.27)	-0.218 (-0.94)
대학(2~3년제) 졸업		0.073 (0.16)	-0.225 (-0.50)
대학(4년제 이상) 졸업		-0.497 (-1.28)	-0.461 (-1.12)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1.252 (0.96)	1.303 (0.98)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년)			0.009 (0.27)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000 (-0.00)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0 (-0.47)
상수항	6.609 (1.63)	8.218+ (1.79)	8.490+ (1.84)
관측수	911	876	837
Adj. R-squared	0.0014	0.0044	0.0067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IV-12>는 5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들 가운데 6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경우가 실험집단으로 정의된다.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

911명 가운데 14.8%가 6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였다. 비록 실험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계수의 추정치가 음(-)의 값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학업성취의 변화에 있어 지원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취 향상의 정도가 크며, 마지막 열에서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 비해 읍/면지역인 경우에 학업성취가 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3.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6-7차 조사

	(1)	(2)	(3)
실험집단	0.390 (1.31)	0.363 (1.17)	0.304 (0.97)
여성	0.545* (2.44)	0.538* (2.35)	0.549* (2.32)
연령	0.213 (0.67)	0.210 (0.63)	0.164 (0.45)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281 (0.76)	0.262 (0.68)	0.389 (1.01)
읍/면	-0.147 (-0.36)	-0.154 (-0.36)	0.080 (0.18)
어머니 연령		0.001 (0.04)	0.021 (0.71)
어머니 학력수준(기준 : 중졸 이하)			
고졸		-0.376 (-1.31)	-0.337 (-1.17)
대학(2~3년제) 졸업		-0.406 (-0.87)	-0.333 (-0.66)
대학(4년제 이상) 졸업		-0.248 (-0.52)	-0.256 (-0.48)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1.461 (-0.81)	-1.260 (-0.68)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년)			-0.032 (-0.87)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087 (-1.43)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0 (0.30)
상수항	-3.546 (-0.75)	-3.339 (-0.63)	-0.746 (-0.13)
관측수	939	903	849
Adj. R-squared	0.0064	0.0041	0.0021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IV-13〉은 6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들 가운데 7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경우가 실험집단으로 정의된다. 939명의 청소년이 분석

에 포함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14.9%가 7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였다. 7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의 향상이 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지만,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속성들 가운데 해당 청소년이 남성인 경우에 비해 여성인 경우 학업성취의 향상이 보다 크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4.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7-8차 조사

	(1)	(2)	(3)
실험집단	-0.936 (-1.50)	-0.975 (-1.49)	-1.068 (-1.53)
여성	-0.372 (-1.11)	-0.399 (-1.17)	-0.329 (-0.92)
연령	0.802+ (1.71)	0.762 (1.55)	0.657 (1.17)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803 (-1.55)	-0.718 (-1.34)	-0.847 (-1.59)
읍/면	-0.346 (-0.61)	-0.253 (-0.43)	-0.595 (-0.99)
어머니 연령		0.049 (1.21)	0.030 (0.71)
어머니 학력수준(기준 : 중졸 이하)			
고졸		-0.534 (-1.26)	-0.358 (-0.83)
대학(2~3년제) 졸업		0.528 (0.77)	0.498 (0.68)
대학(4년제 이상) 졸업		-1.113+ (-1.67)	-1.265+ (-1.68)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1.795 (-0.85)	-0.051 (-0.02)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년)			0.071 (1.09)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238* (-2.25)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4* (-2.33)
상수항	-14.780+ (-1.95)	-16.142+ (-1.91)	-5.175 (-0.53)
관측수	969	936	874
Adj. R-squared	0.0034	0.0077	0.023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IV-14>는 7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들 가운데 8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경우가 실험집단으로 정의된다.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은

969명으로, 이 가운데 8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비중은 10.2%에 해당한다. 학업성취의 향상에 있어, 8차년도에 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제변수들 가운데 청소년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수준,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 가구 소득이 해당 청소년의 학업성취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이 보다 높을수록 해당 자녀의 학업성취가 보다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

표 IV-15.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이중차분, 8-9차 조사

	(1)	(2)	(3)
실험집단	-0.644 (-0.77)	-0.721 (-0.84)	-0.808 (-0.90)
여성	0.954* (2.28)	1.055* (2.48)	1.260** (2.85)
연령	0.200 (0.38)	0.189 (0.35)	0.565 (0.87)
거주지역규모(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144 (0.23)	0.088 (0.14)	0.163 (0.25)
읍/면	0.469 (0.70)	0.544 (0.80)	0.653 (0.92)
어머니 연령		0.016 (0.30)	0.016 (0.27)
어머니 학력수준(기준 : 중졸 이하)			
고졸		0.252 (0.47)	0.170 (0.31)
대학(2~3년제) 졸업		1.159 (1.12)	1.625 (1.51)
대학(4년제 이상) 졸업		0.789 (0.98)	0.764 (0.85)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2.158 (1.38)	1.516 (0.83)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년)			0.063 (0.82)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026 (0.22)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1 (0.39)
상수항	-4.256 (-0.48)	-5.339 (-0.56)	-20.547 (-1.53)
관측수	951	917	865
Adj. R-squared	0.0109	0.0075	0.0117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1%와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및 강원권, 경상권, 전라 및 제주권)과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표 IV-15〉는 8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지 않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이들 가운데 9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한 경우가 실험집단으로 정의된다. 분석에 포함된 951명 가운데 0.2% 만이 9차년도에 지원을 수혜하였다. 지원의 학업성취 향상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해당 청소년이 여성인 경우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속된 두 조사 시점의 자료에 한정된 이중차분 분석 대신에 모든 조사 시점의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패널자료 분석이 가능하다.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다문화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중차분을 통한 분석에서 4차년도와 5차년도 자료에 한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과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16.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패널분석, 학습보조 선생님

	2~9차		2~6차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다문화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	0.092 (0.98)	0.143 (1.5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여부			0.370 (0.87)	0.350 (1.10)
연령	0.832** (16.49)	-0.268 (-1.29)	-0.150 (-1.38)	-0.248 (-0.93)
어머니 연령	-1.479** (-29.70)	-0.016 (-1.06)	-0.224* (-2.19)	-0.014 (-0.73)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017 (0.56)	0.065** (2.72)	-0.001 (-0.02)	0.123** (3.64)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0 (0.19)	0.002** (3.47)	0.001 (0.53)	0.002** (3.19)
상수항	78.083** (34.75)	19.337** (7.80)	29.631** (7.39)	18.569** (5.84)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관측수	1,394 9,540	1,394 9,540	1,200 2,699	1,200 2,699
R-squared				
within	0.1765	0.1741	0.1011	0.0936
between	0.0030	0.0835	0.0000	0.0558
overall	0.0090	0.1265	0.0013	0.0626
Hausman test	30.95*		21.73*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과, 거주지역의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다문화 관련 지원 중에서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여부는 2차년도 자료부터 6차년도 자료에 포함되었으며, 이의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는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다.

표 IV-17.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 패널분석, 학습지 지원, 학습지원

	2~6차		7~9차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학습지 지원 여부	0.017 (0.06)	0.151 (0.65)		
학습지원 여부			-0.610 (-0.77)	0.154 (0.25)
연령	-0.162 (-0.88)	-0.241 (-0.91)	0.581 (0.77)	0.295 (0.38)
어머니 연령	-0.216 (-1.17)	-0.013 (-0.71)	-	0.085 (1.55)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	-0.002 (-0.04)	0.122** (3.61)	-0.074 (-0.30)	-0.008 (-0.07)
가구의 월평균 소득(만원)	0.001 (0.57)	0.003** (3.23)	0.008 (0.83)	0.002 (0.68)
상수항	29.354** (4.28)	18.488** (5.82)	0.147 (0.01)	1.372 (0.09)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관측수	1,200 2,699	1,200 2,699	355 516	355 516
R-squared				
within	0.1004	0.0928	0.1121	0.1024
between	0.0000	0.0564	0.0016	0.0887
overall	0.0012	0.0625	0.0072	0.0881
Hausman test	22.33*		3.09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에 해당하며,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거주지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과, 거주지역의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를 나타내는 각각의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결과는 표시되지 않음

학습지 지원 여부 역시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여부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 조사부터 6차년도 조사까지 포함되었으며, 패널분석을 통한 이의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차년도 조사부터 9차년도까지의 조사에서는 학습지 지원 여부가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소결

1)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

청소년정책 사업 가운데,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각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의 비중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있어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규모, 가구소득으로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매칭하여 속성이 유사한 청소년들로 분석을 한정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정책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의 정도가 매칭 여부와 상관없이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낮아지나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정책에 있어 인지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 정책(사업)의 이용 혹은 수혜와 만족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규모를 기준으로 읍이나 면지역과 같은 농촌 거주 청소년은 교육 관련 서비스-즉,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교과목 학습지도, 무료 방문학습지,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현금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물적지원, 진로 프로그램-에서 수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도움의 정도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다 취약한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육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3) 정책(사업)의 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대상 교육 관련 지원정책의 학업성취 개선 효과를 이중차분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기간의 일정 시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

을 검증하기 위한 패널자료 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이중차분모형에서의 특정 시점에 한정된 정책의 효과를 지지한다.



제5장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 1. 독일
- 2. 핀란드
- 3. 노르웨이
- 4. 프랑스
- 5. 소결

1. 독일

1)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

독일의 청소년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요구와 권리는 1991년 발표된 ‘Book VIII-아동, 청소년 서비스(Sozialgesetzbuch Ahtes Buch Kinder- und Jugendhilfe, SGB VIII)’¹⁶⁾ 연방법에서 다루고 있다.¹⁷⁾ SGB VIII에 의하면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27세 미만까지 ‘young person’으로 정의하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¹⁸⁾

독일에서는 연방(Bund), 연방주(Länder), 지역(Kommune)¹⁹⁾당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청소년전략은 없지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정부기관 간, 정부와 NPO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특정 부서중심이 아닌 부문중심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²⁰⁾

청소년 관할 부서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연방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²¹⁾는 연방주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청소년정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연방주와 지역은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기조에 기반하여 청소년정책 전략을 실행하는데, 주로 청소년사무소(youth offices)를 통해 청소년 서비스에 공통절차와 기본원칙을 개발한다.²²⁾

16) 이후 SGB VIII로 표기

17) Youth Wiki. Germany Overview.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overview>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18) Youth Wiki. Germany 1.1 Target population of youth policy.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1-target-population-of-youth-policy>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19) 연방(National), 연방주(Regional), 지역(Local)을 말한다.

20) Youth Wiki. Germany 1.3 National youth strategy.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3-national-youth-strategy>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21) 이후 “BMFSFJ”로 표기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삶의 기술 습득(Qualifizierung),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 찾기(Seibstpositionierung),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부여(Verselbstständigung)와 같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에 두고 모든 부문에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실행한다.²³⁾ 이는 독일의 청소년정책이 부서중심에서 부문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직업교육훈련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Baden-Württemberg 과학부는 수년 동안 학습방향테스트인 오리엔테이션 테스트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자 견습과정을 포함한 전문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최근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과 뮌헨교육부의 각각 50% 재정부담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특별지원은 3,500명의 취약청소년이 3년 동안 취업지원 자금을 통해 개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²⁴⁾

청소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과 NPO기관 간의 협력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지역 차원에서 실행할 수 없는 인적자원, 조직 등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수행한다. 바이에른 연방주의 사례²⁵⁾는 보충성의 원칙을 잘 보여준다. 2022년 3월 바이에른 연방주는 연방교육연구부, 노동·사회부, 연방고용청과 함께 ‘완료와 연결-교육완료까지 교육사슬’ 계획을 협정하였는데, 바이에른 연방주에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방과후 다양한 직업의 기회와 훈련을 제공하던 사업을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면서 ‘직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직업훈련의 혁신적인 경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총 8개 분야에서 청소년들에게 차세대 숙련 노동자로서의 기회제공이 강화되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지원, 자문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노년여성청소년 위원회(Ausschus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연합정부의

22) Youth Wiki. Germany.1.Youth Policy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youth-policy-governance>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23) Youth Wiki. Germany 1.3 National youth strategy.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3-national-youth-strategy>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24) bildungsklick(2022.4.22.). Benachteiligte Jugendliche besonders unterstützen. <https://www.km.bayern.de/pressemitteilung/12122/nr-049-vom-22-04-2022.html>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25)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Unterricht und kultus(바이에른 주 교육문화부)(2022.03.24.). Bayern setzt die erfolgreiche Zusammenarbeit mit dem Bund in der 'Initiative Bildungsketten' bis 2026 fort. <https://www.km.bayern.de/pressemitteilung/12105/bayern-setzt-die-erfolgreiche-zusammenarbeit-mit-dem-bund-in-der-initiative-bildungsketten-bis-2026-fort.html>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의회기관으로 BMFSFJ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소위원회 중 어린이위원회(Kinderkommission, KiKo)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익을 증진하고,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다. 정치, 행정, 협회, 학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 BJK)는 연방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서비스와 관련된 기본문제, 부문 간 아동 및 청소년정책문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 문제에 대해 평가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정치의식 축진을 지원하는 연방시민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검토위원회(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등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다.²⁶⁾

2) 교육정책에 나타난 취약 청소년정책

독일의 교육정책은 연방정부와 연방주사이에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데, 학교법에 대한 입법권한이 연방주에 있어서, 연방주는 법에 의한 자체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독일 전체로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의무교육이며 초등·중등교육의 전일제 의무교육과 이후 의무직업교육으로 구성된다.

표 V-1. 연방주별 의무교육 대상 및 내용

연방주	의무교육 대상	전일제 의무교육	의무직업교육
바덴뷔르템베르크	18세까지	초등 4,5학년	도제기간동안 (의무직업교육이 끝나기 전)
브레멘	12세까지	직업학교입학자격, 일반교육 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견습기간 동안
헤세	21세	9년	견습기간 동안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18세	초등, 중학교 10년 김나지움 9년 전일제 의무교육 10년차를 직업학교 1년차로 대체 가능	견습기간 동안 21세가 되기 전
색스니탈실	원칙적으로 12년	9년	도제기간 동안
튀링겐	원칙적으로 12년	9년	견습생이 21세가 되는 연도의 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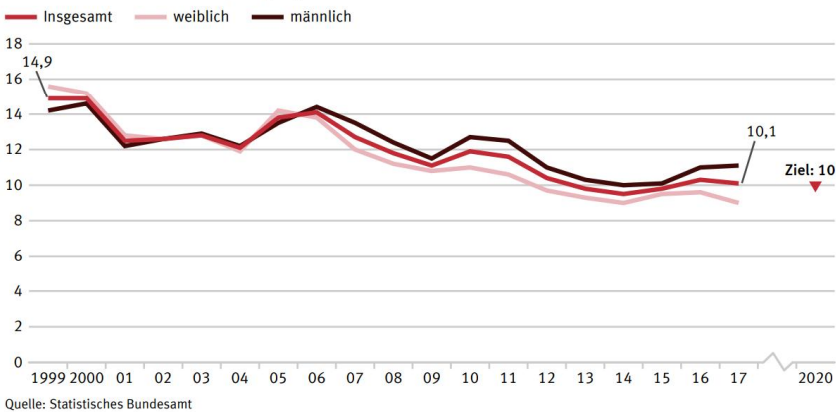
* 출처: Youth Wiki. Germany 6.1 General contex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1-general-contex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26) Youth Wiki. Germany 1.4 Youth policy decision-making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4-youth-policy-decision-making>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 학교조기포기방지 (Preventing early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이 교육과 훈련을 조기에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단일 전략이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과 실행계획이 있다. 2007년 교육문화부장관 상임회의는 학력이 없는 학생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보호하며, 도제조기 이탈자 수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Handlungsrahmen Schulabbrecher)을 채택하였으며, 2017년 업데이트 된 실행계획은 연방주에서 수행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적시하였는데, 이는 ① 교실에서의 개별지원, ② 실습교육제공, ③ 이민자가정의 추가지원 제공, ④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일반 중학교 자격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⑤ 직업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전문화 등이다.²⁷⁾

Frühe Schulabgängerinnen und Schulabgänger (18- bis 24-Jährige)
Anteil an allen 18- bis 24-Jährigen, in %



*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18). Nachhaltige Entwicklung in Deutschland – Indikatorenbericht 2018. p.30.
* 원출처: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그림 V-1. 독일의 조기 학교 중퇴자(18-24세) 비율 변화

그림 V-1을 통해 살펴보면, 조기 학교 중퇴자(18-24세)의 비율은 10.1%(614,천명)로 유럽의 목표치인 10%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의 조기 학교 중퇴자에

27) Youth Wiki. German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1월 10일 인출.

대한 정책은 다양하게 진행된다.

- 학교에서 직장까지 Initiative on Educational Chains(Initiative Bildungsketten : 2010-2020)²⁸⁾ : ‘학교에서 직장까지’ 교육연결계획은 2010년 BMBF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연방고용청(Agentur für Arbeit)과 연방주 간의 협력모델로 발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칭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조정되는 경력오리엔테이션과 연방주의 지역자금을 통한 전환 조정을 하는 지역조정, 청소년들의 자격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는 통합훈련을 거쳐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 Preparatory vocational measures (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ßnahmen 예비직업조치)²⁹⁾ : 이 프로그램은 25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 도제, 훈련장소를 찾지 못했거나 장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개인적성분석을 받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실용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전문지식은 물론 개인 개발, 84 기본직업기술, 사내교육, 기본 IT 및 미디어 기술교육, 언어교육, 면접교육을 받는다. 이와 관련 2009년 1월 ‘학교졸업자격이 없는 청년 및 성인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도구강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중학교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법적 자격을 설정하고 연방고용청이 비용을 부담한다.
- 청소년강화 계획(Initiative JUGEND STÄRKEN)³⁰⁾ : 2009년 BMFSFJ의 ‘청소년 강화 계획’은 모든 청소년 사회사업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참여기관 간 협력수준을 향상시킨다. 학교 및 지역노동시장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청소년 사회복지활동을 수요-중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에 중점을 두었다. 하위 계획을 살펴보면, 취약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이웃의 청소년 강화’, 이민자를 위한 상담·지원교육 ‘청소년 이주 서비스’,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실비지원과 취업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청년강화

28) bildungsketten.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die-initiative/die-initiative>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29) Youth Wiki. German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30) Youth Wiki. German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1000 기회’, 독일계 이민자와 외국인민을 위한 대학학위과정수강지원으로 ‘고등교육 보장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방주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Thuringia-Programme ‘Success makes school’³¹⁾ : 튀링겐 교육청소년체육부와 독일아동청소년재단이 중퇴율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 지원에 선정된 30개 이상의 학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교가 발굴한 네트워크에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School social work(학교사회사업)³²⁾ : 학교사회사업은 사회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Saxony-Anhalt의 ‘학교에서의 성공보장’ 프로그램은 유럽사회기금과 Saxony-Anhalt의 교육부가 지원하고, 독일아동 및 청소년재단과 국가조정사무소가 주관, 모든 지역의 네트워크 사무소에서 실행한다. 베를린은 2006년 청소년사회사업에 관한 ESF 프로그램을 2010, 2011년 통합중등학교에 포함되는 저학력 유형의 중학교에서 시작하였으며, 2007년 특수지원학생을 위한 청소년 사회사업을 시작하였고, 2009년 초등학교와 직업학교로 확대 지원하고, 김나지움(Gymnasium) 유형의 학교에도 제공하였다. 베를린 사회교육연구소재단이 전체 프로그램을 조정·관리한다.

정부 외 지역자원을 통해 조기이탈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³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베를린 사회교육 연구소 재단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중심의 프로젝트Parachute-Assistance for delinquent children and adolescents는 비행아동 및 청소년, 학교에서 파괴적 행동, 학교이탈 아동 및 청소년, 상습범죄미성년의 비행행동전환을 위해 지원하고, Cottbus에 있는 Sachsendorf 중등학교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습 워크숍 ‘레오나르도 마스트클래스’ 9학년 또는 10학년에 학교 이탈 행동을 보이는

31) Deutsche kinder-und jugendstiftung. <https://www.dkjs.de/themen/alle-programme/erfolg-macht-schule/>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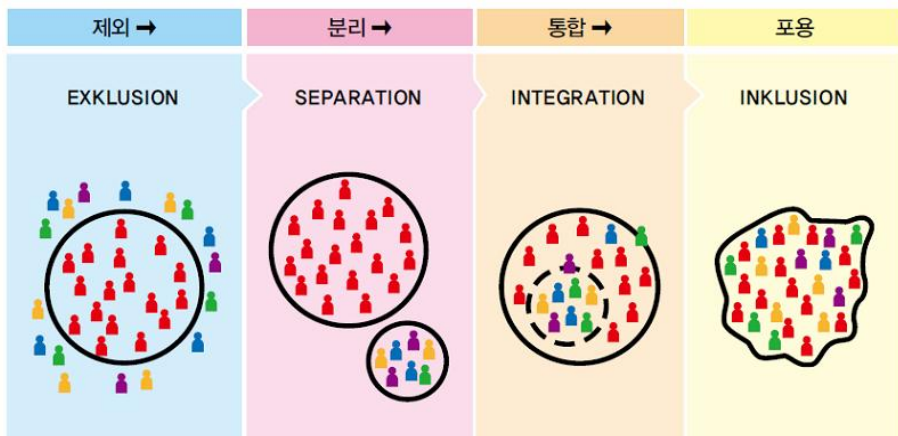
32) Youth Wiki. German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33) Youth Wiki. German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진로지도와 지역기업연수를 통해 노동시장에 대비한다. 이 프로그램은 브란덴부르크 전역에서 복제되었다.

- North Rhine-Westphalia로부터의 사례 : Jugendhilfe Köln e.V.는 1976년 설립 이래 16세에서 21세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을 제공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Apeiros (Wuppertal, Remscheid, Velbert, Solingen) : Apeiros는 결석관리 및 표준화된 신속대응접근방식을 통해 학교 이탈, 조기퇴학, 견습중퇴 등 조기조치를 추구한다. 이 전략덕분에 학교, 견습중퇴율이 90%까지 감소하였다.

○ 특수 교육 지원



* 출처: 정수정(2018, 가을호). 장애/비장애 학생의 동등한 교육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독일: 장애는 다름의 하나.

그림 V-2. 독일의 특수교육 발전 형태

독일의 특수교육은 [그림 V-2]와 같이 변화해왔다. 1973년 연방교육부는 통합교육을 장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986년 잘란트(Saarland)주가 가장 먼저 통합교육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주가 통합교육의 기회를 교육법에 명시하였다(정수정, 2018).³⁴⁾

34) 현장특수교육(2010). 제17권 여름호, 특특특 “독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https://www.nise.go.kr/jsp/field/2010-2/04.jsp>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독일은 특수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포용교육(inklusive Bildung)에 중점을 두고, 통합교육이 일반화 될 경우 특수학교 명칭을 지원센터(Forderzentrum)로 기능을 바꿀 수 있다.

독일의 장려학교³⁵⁾의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지체, 정서, 시각, 청각, 정신지체, 농맹아), 학습장애, 건강장애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학습장애로 분류하는데 전체 장애 학생 중 절반가량이 학습장애에 속한다. 대부분의 연방주의 특수교육법이 일반학급에서 2회 유급일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한다. 독일은 유치원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유치원이나 통합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필수이며, 특수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통합유치원은 교육비를 내야 한다.³⁶⁾



* 출처: 김용진(2017). 모두를 위한 독일의 통합교육.

그림 V-3. 독일의 통합 수업 모습

김용진(2017)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³⁷⁾ 중 통합교육은 31.4%인데, 이는 2006년 15.7%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었

35) 독일의 특수학교를 말함
 36) 현장특수교육(2010). 제17권 여름호, 톡톡 “독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https://www.nise.go.kr/jsp/field/2010-2/04.jsp>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37) 독일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컫는 표현에 해당함.

으며, 매년 통합교육으로 2~3%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통합교육은 교실 안의 동일성을 경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든 학생들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독일의 통합교육은 개인별 차이의 인식을 확대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뚜렷한 경계 인식이 허물어져간다.

독일은 이민자의 학습훈련을 위한 많은 지원을 고려하는데, 최근 함부르크(Hamburg)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1, 2학년을 위한 언어지원 프로그램 앱을 32개 초등학교에 보급하였다. 언어지원 프로그램은 Fairchance Foundation의 검증된 ‘MIT Sprach’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아이들의 언어수준을 측정한 후 5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이 앱은 함부르크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HAVAS(함부르크 방식의 언어능력 분석) 도구를 보완한 앱으로 지도교사는 자료사용을 위해 1년의 실습교육과정을 받아야 하고, 보호자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연방주정부, 재단의 협력으로 개발되었다.³⁸⁾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연방교육부(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의 자금지원으로 ‘이민사회의 언어교육 메타프로젝트’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에서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21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언어교육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이 메타프로젝트는 21개 하위 프로젝트의 작업을 연결 및 병합함으로써 포괄적인 언어교육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쾰른대학교의 독일어연구소, 함부르크대학교, 독일성인연구소의 라이프니츠평생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다.³⁹⁾

2017년 Equity and Excellence Monitor(Chancenspiegel)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주에서는 학교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어지며, 불우한 배경의 학생들의 기회는 개선되었지만, 교육적 성공과 사회적 배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여전히 주요과제로 남았다.⁴⁰⁾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이중시스템(Duale Berufsausbildung)으로 직업학교

38) bildungsklick(2022.8.29.). Hamburg startet neues Sprachförderprogramm für Kinder. <https://bildungsklick.de/schule/detail/hamburg-startet-neues-sprachfoerderprogramm-fuer-kinder>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39) MERCATOR INSTITUT(2022.8.10.). Sprachliche Bildung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Metavorhaben startet. <https://www.mercator-institut-sprachfoerderung.de/de/aktuelles/meldung/2022/sprachliche-bildung-in-der-einwanderungsgesellschaft-metavorhaben-startet>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40) Youth Wiki. Germany6.1 General contex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1-general-context>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Berufsschule)에서의 이론 훈련과 직장에서의 학습의 결합이다. 직업교육훈련은 다양한 부처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노동시장과 청년고용을 담당,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는 직업훈련을 위한 일반적인 조정권한을 갖는다. 연방경제에너지부(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는 학교와 신생기업에서 기술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하고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는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법에 대한 집행 책임과 취약청소년과 청(소)년 이민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한다.⁴¹⁾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복지기관들(Youth welfare agencies)은 청소년을 위한 직업 지원(Jugendberufshilfe) 일환으로 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 전환한 후 취업으로 가는 동안 취약청소년을 지원한다. 카톨릭 청소년 사회사업을 위한 연방실무위원회(Bundesarbeitsgemeinschaft Katholische Jugendsozialarbeit e.V., BAG KJS)는 청년사회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구축하고 청(소)년을 직장에 통합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들이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지원한다.⁴²⁾

실제로 직업교육훈련은 연방주에 따라 다른데 브란덴부르크주 교육부⁴³⁾는 최근 2022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을 여는 자 : 미래의 직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직업훈련과정을 찾도록 지원하거나 직업훈련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직업훈련을 시작한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바이에른 문화부⁴⁴⁾는 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으로 졸업하기 1년 전 시작하여 직업교육의 첫 학년까지 연계되는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

41) Youth Wiki, Germany 3.2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32-administration-and-governance>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42) Youth Wiki, Germany 3.2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32-administration-and-governance>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43) 브란덴부르크주교육부(2022.7.19.). Programm „Türöffner“ zur Unterstützung von Jugendlichen am Übergang Schule-Beruf wird verlängert. <https://mbjs.brandenburg.de/aktuelles/pressemitteilungen.html?news=bb1.c.741270.de>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44) bildungsklick(2022.4.22.). Benachteiligte Jugendliche besonders unterstützen. <https://www.km.bayern.de/pressemitteilung/12122/nr-049-vom-22-04-2022.html>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5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이 3년간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함부르크(2021.02.12. 보도자료)는 독일이 청소년들의 직업전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함부르크 지역학교의 자퇴자(청소년 1,692명)의 41%가 10학년을 마친 후 직장생활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독일의 모든 연방주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으로 안전한 진입을 위해, 개인이 갖고 있는 학업중단의 위기를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핀란드

1)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원칙은 크게 두 방향이다. 행정과 정책 결정, 사회적 활동 대책들과 개발업무의 구조 구축과 확립을 꾀하는 한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위치 강화와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 정치가 강조되었다(민전순, 2013).

2006년에 개정된 ‘청소년법’에 의하면 청소년 업무의 대상은 만 2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문화부에서 청소년 업무와 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발전과 조정을 맡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큰 특징은 청소년 권리를 존중하는 ‘청소년법’이 별도로 있다는 것인데 서현수(2021)에 따르면 ‘청소년법’에 따라 교육문화부는 부문별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조건을 향상하며, 세대 간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것에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4년 주기의 범정부적 ‘국가청소년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VANUPO: Valtakunnallinen nuorisotyön ja politiikan ohjelma)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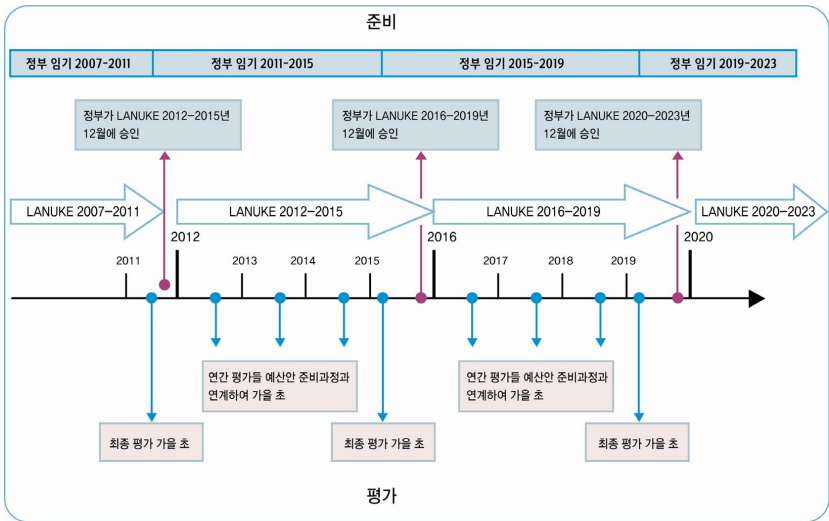
교육문화부는 중앙단위의 청소년 노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은 교육문화부가 총괄부서이긴 하나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세대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원의 다양한 영역(생계, 스포츠, 문화, 교육, 주택, 건강 등)부서의 협력을 통해 실행된다.⁴⁵⁾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를 실행하는데, 청소년협회 및 그룹, 기타 청소년

45)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홈페이지. Youth work. <https://okm.fi/en/youth-work>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업무 관련 조직이나 기구와 함께 지원한다. 특히 시는 청소년업무서비스 제공이 주요 역할이며, 지역의 기관들 간 연계협력 등에 대해 지원하고 청소년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⁴⁶⁾

핀란드는 청소년들의 활동지원이 활발한데, 대표적으로 청(소)년 노동전문센터(Youth work centres of expertise)와 전국청소년센터(National youth centres)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⁴⁷⁾ 전문센터로서 적격성에 대한 승인은 교육문화부가 맡아서 한다. 청소년 노동전문센터는 지역의 청소년정책 프로그램에 명시된 목표와 청소년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역량, 전문성, 커뮤니티케이션을 개발하고 촉진한다.



* 출처: 민전순(2013).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p.56

그림 V-4. 아동 및 청소년정책 개발프로그램 LANUKE 계획

전국청소년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단체, 기타 법인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그룹들의 캠프 활동을 조직한다. 특히 자연 속에서 야외모험교육, 체험학습, NUOTTA 훈련 등 청소년에게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한다. 핀란

46)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홈페이지. Youth work. <https://okm.fi/en/youth-work>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47)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홈페이지. Youth work centres of expertise and National youth centres. <https://okm.fi/en/national-youth-centres>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트의 국립청소년센터는 Youth Centre Anjala, Kouvola, Youth and Holiday Centre Hyvärilä: Nurmes, Youth & Holiday Centre Vasatokka: Inari, Youth Centre Metsäkartano: Rautavaara, Youth Centre of Marttinen: Virrat 등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청소년노동분야의 지원은 특정 자격요건이 없고, 직업고등학교자격이면 가능하다.

2) 포용적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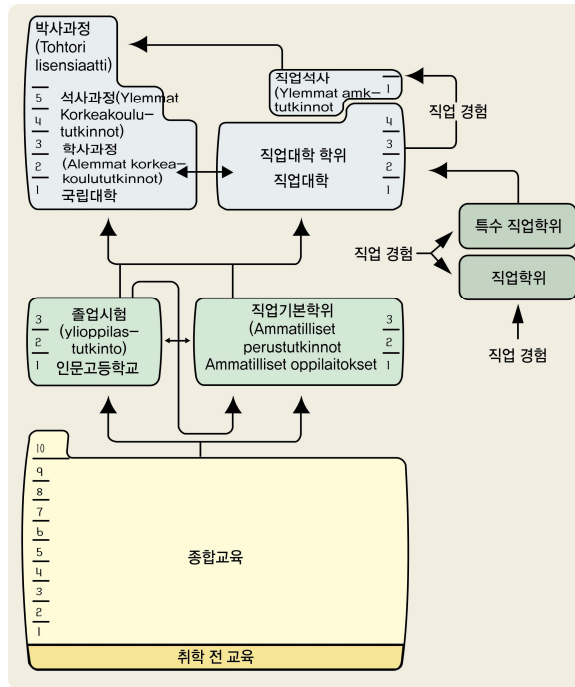
핀란드의 교육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7세부터 16세까지 9년간의 초·중·등 종합교육 기초교육단계, 기초교육 과정 이후 일반고등학교와 직업고등학교로 나뉘어지며, 다음으로 고등교육과정으로 직업대학과 국립대학으로 구분된다.⁴⁸⁾ 2021년 의무교육을 18세까지 확장한 핀란드는 모든 학생이 종합교육을 마치고 중등교육자격 취득을 목표로 기초교육에 집중지원을 통해 초기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통한 성장발달을 꾀한다.

헬싱키 대학의 Jahnukainen교수는 핀란드교육정책의 기본신념을 지역수준으로의 의사결정 권한 이양이라고 말하면서, 학교 및 교사들과 함께 지자체가 지역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국가교육과정에 기반해 평가의 개관을 짜며, 학교에 자원을 분배한다고 말한다(Jahnukainen, 2022.9.30.).

특히, 2010년 기초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습과 성장에 있어서 조기의 예방적인 지원, 필요하다면 특별지원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장애의 상태와 장애 극복의 정도에 따라 일반지원(다양성), 집중지원(위험에 처한 학생들), 특별지원(포용적 학습이나 특수학급/학교에서 전일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점차 강화하였다(장수명, 2015). 일반지원은 개인별 학습계획에 따라 각각 맞춤형 지원 되는데, 담임과 학생복지그룹(Student Welfare Group: SWG)⁴⁹⁾의 평가를 거쳐 집중지원단계가 결정된다. 집중지원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특수지원단계로 가는데, 특수지원단계의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개인별 교육계획(IEP)을 갖는다.

48) Youth Wiki. Finland 6. Education and Training.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61-general-contex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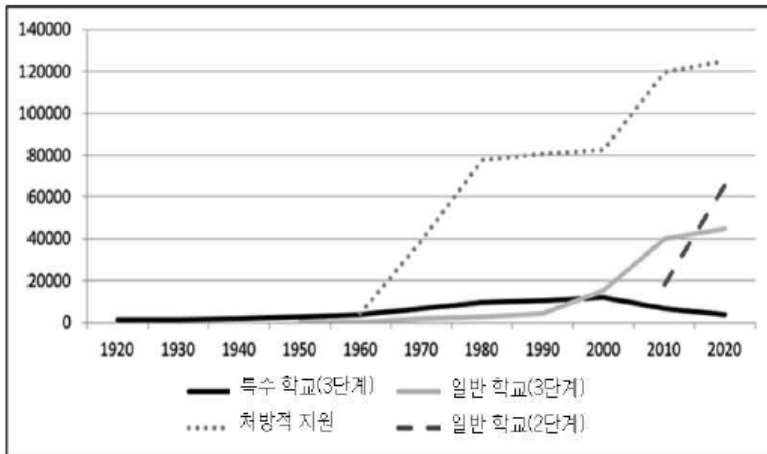
49) SWG는 학교 내와 지역단위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교장, 교감, 심리학자, 학교간호사, 특수교육교사, 담임교사, 복지사, 학생어드바이저 등이 참여한다.



* 출처: 민전순(2013).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p.39

그림 V-5. 핀란드의 교육과 학위체계

장수명(2015)은 핀란드 특수교육의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1단계는 종합학교 개혁(1968년-1997년)으로 미숙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과 보다 잠재력이 높은 아동들이 동일한 교실에서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발전단계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을 통한 특수교육의 주류화 과정이었다. 1997년 기본교육개혁(The Basic Education Act of 1997)을 준비하는 과정과 법의 실행과정에서 특수교육의 주류화가 이루어졌다. 이전까지 심각한 장애 아동들은 요양소나 비(非)공공 교육시설에 배치되었는데, 이 법으로 일반학생들의 주류화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대에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는 2007년 특수교육 정책의 전환이라 말하며, 핀란드는 특별교육을 위해 분리된 학교 대신 '이웃학교' 원칙을 강조하였다.



* 출처: Jahnukainen(2022.9.30). 핀란드의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과 특수교육 개발. p.39

그림 V-6. 핀란드의 특수지원제도 발달

이런 발전과정을 통해 김상훈(2017.12.20.)은 일반지원(general support), 집중지원(intensified support), 특수지원(special support)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일반 아이들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장애 가능성이 예측되거나 정도의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 집중지원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수지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아동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특수교육은 일반 아이들까지 긍정적 교육환경을 갖게 되는데, 이런 핀란드의 특수교육의 체계는 장애아동뿐 아니라 비장애 아동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비장애 아동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특수교육체계의 전환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3. 노르웨이

1)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

노르웨이는 별도의 청소년법이 없기 때문에 통합된 청소년정책이 존재하지 않지만 김지연과 김희진(2018)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정책원칙 및 가이드라인으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아동·청소년정책 장려를

위해 ‘정책 및 예산 준비에 관한 연례보고서’, ‘아동 및 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 보고서’가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핵심부처는 교육부와 아동가족부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에도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회문제 및 보건, 문화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아동청소년 문제에 관한 국무장관정책위원회가 부처 간의 그룹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정역할을 한다. 국무장관정책위원회는 매월 모임을 갖고, 여러 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정부와 정당에 강력한 정치적 약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과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부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One Voice 간행물을 제작한다.⁵⁰⁾

노르웨이의 기초자치단체는 가용자원을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노르웨이의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책임의 분권화, 비정기적 또는 가상자금조달, 활동조직에 관한 세부 요구사항 감소의 방향으로 관계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옴브즈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실행을 조사하고 제안한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중등교육, 문화 및 여가활동, 교통 및 통신, 사회 및 아동복지서비스가 주정부로 이관되어왔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매우 다양하다.⁵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대표적인 법안인 아동복지법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1월부터 주정부의 취약아동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중앙정부 책임으로 가져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및 방치, 범죄,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같은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한 의뢰기준 절차를 설정한다. 노르웨이의 형사책임연령은 15세인데, 15세 미만의 청소년 관련 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개입과 주택 및 교육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였다. 아동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위탁가정에 대한 관리를 중앙정부로 이양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표준화된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⁵²⁾

노르웨이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는 참여이다. 청(소)년은 부서의 업무프로세스에 밀접하게 참여한다. 청(소)년 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주로 조직의 개발 및 실행, 청소년 참여, 청소년의 영향력 및 통제강화에 사용되는데, 청(소)년 단체의 보조금 지원

50)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10.

51)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p.21-22.

52)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p.23-26.

자격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신청조직이 민주적 구조를 가졌는가이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단체는 1978년 전체 회원이 약 85만 명에서 2003년 약 30만 명으로 심각하게 감소하였다.⁵³⁾

전국아동청소년협의회(LNU)는 노르웨이 청소년정책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LNU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지 않은 청소년을 대변한다. 또한 파트너우산단체(장애청소년 및 전국청소년클럽협회)와 어린이옴부즈만, 학교와 긴밀히 협력한다. LNU는 청소년조직을 대표하지만 정당정치는 피하고, 게이 및 레즈비언 청소년 및 소수민족과 같은 특정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⁴⁾

2) 교육훈련

노르웨이의 학교 제도는 ‘초·중등교육법’(Act of relating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Act, 1998년 제정)에 적용받는다. 노르웨이 교육 제도는 [그림 V-7]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유치원, 초·중학교교육, 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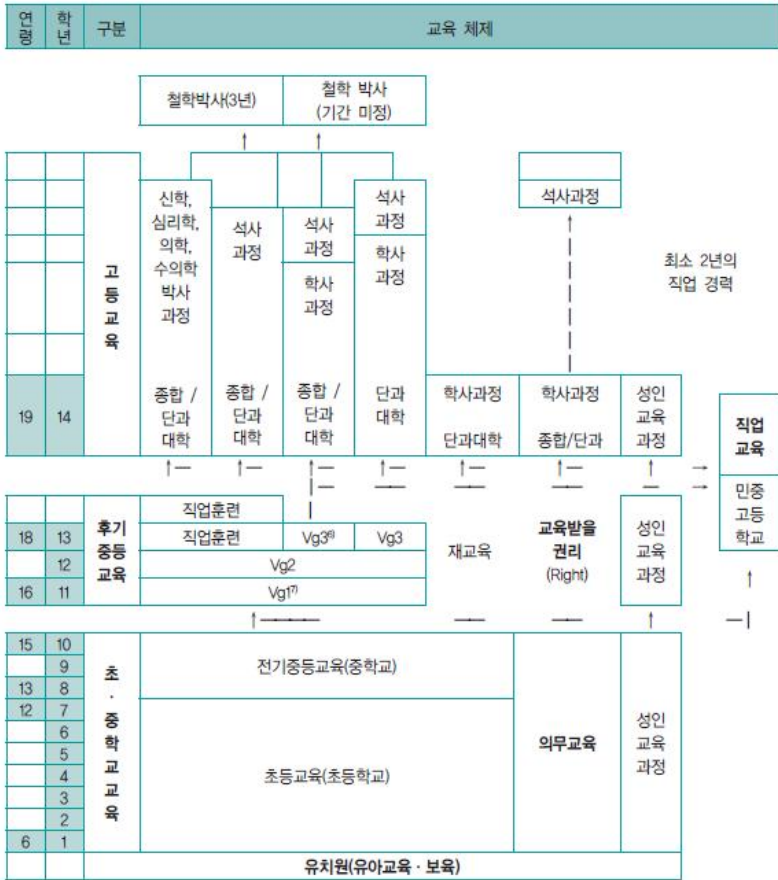
초·중학교의 10년은 의무교육이고,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니나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⁵⁵⁾ 후기중등교육을 조기에 포기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이다. 이를 통해 일부는 학교로 돌아오고, 일부는 취업 또는 다른 대안을 제공받는다. 노르웨이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체에 교육정책 관련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도 함께 존중되고 있다.⁵⁶⁾

53)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27

54)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p.30-31.

55) Youth Wiki. Norway 6.1 General contex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orway/61-general-contex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56)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32.



* 출처: 이덕년(2013). 노르웨이의 교육행정과 교육복지. p.61

* 원출처: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EDUCATION IN NORWAY 2007」 p.25

그림 V-7. 노르웨이의 학교 제도

노르웨이는 교육역량개혁(교육연구부 2003년)을 통해 형식 및 비형식학습의 역량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모든 성인이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세 가지 근거로 1) 노동시장을 위한 기술의 적절한 사용 보장, 2) 개인에게 두 번째 기회의 제공, 3) 정의감 보장을 통한 시민권과 민주주의 강화가 제시된다.⁵⁷⁾

57)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33.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왕관의 보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기평가를 통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정을 수강한 사람들이 정식입학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성취에 도달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민자의 직업능력이 노르웨이의 자격구조의 맥락에서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의무교육 이후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을 강화했고, 역량개혁은 기술, 자격 및 경험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확보 및 추가교육에 대한 자격을 확대했다.⁵⁸⁾

고등교육성취를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bedre gjennomføring i videregående opplæring)은 조기퇴학을 줄이기 위한 주요 계획으로, 1단계에서 조기퇴학방지 대상자에 대한 의회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화하고, 2단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목표측정방법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⁵⁹⁾ 2015년부터 보건국, 아동청소년가족국, 노동복지국, 교육국 등 ‘0-24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제를 갖추었다.⁶⁰⁾

노르웨이는 1960년대 들어와 교육이 가능한 사람과 교육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1975년 특수교육법이 폐기되고, 일반교육법 내에 특별요구 교육조항 신설, 시각청각장애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특수학교가 폐교되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모든 부처와 사회구조에 반영된다.⁶¹⁾

장애인 복지정책(Individual Plan)은 케어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개인에게 전문가 1명을 배정하고, 전문가는 당사자 및 가족들과 상의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계획을 세운다. 또한, 가출청소년, 범죄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 청소년범죄자 등 청소년들은 1986년 설립된 아동복지위원회에 의해 보호된다(김지연, 김희진, 2018).

노르웨이는 청소년법이 별도로 없지만,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부서

58) Maria 외(2004). 2004년 유럽평의회의 국제전문가팀의 국가청소년보고서-Youth policy in Norway. p.33.

59) Youth Wiki. Norwa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orwa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60) Youth Wiki. Norway 10.2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youth work.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orway/102-administration-and-governance-of-youth-work>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61) 비마이너 홈페이지 2012.11.14. ‘시설없엔 노르웨이, 통합은 현재진행형’ 강연, 윤상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8>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장애를 수단으로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4. 프랑스

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

프랑스 청소년 업무 주무부처는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이다.⁶²⁾ 주무부처 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 지방당국, 협회 등 다중파트너기반의 정책을 펼친다. 2013년 2월에 범부처청소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가 '13개의 청소년 우선정책(Priorité jeunesse)'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당시 정책 수립에 참여한 부처만 해도 15개가 되었다.⁶³⁾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에 해당하는 레종(région)은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Directions régionales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DRJSCS)에서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département)에서 사회통합실(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DDCS) 또는 사회통합주민보호실((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 la population, DDCSPP)에서 청소년정책을 다룬다.⁶⁴⁾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 목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⁶⁵⁾

- 청소년들의 개인개발에 참여하고, 그들의 참여와 이동성을 촉진
- 교육, 지도 및 훈련에 우선순위를 부여
- 고용 및 직업통합을 촉진
- 생활조건 개선

62) Youth Wiki. France Overview.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overview>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63) Federation des acteurs de la solidarite(연대행위자연맹)(2013.02.25.).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A QUAND UNE VÉRITABLE POLITIQUE GLOBALE DE LA JEUNESSE?. <https://www.federationsolidarite.org/actualites/comite-interministeriel-de-la-jeunesse-a-quand-une-veritable-politique-globale-de-la-jeunesse/>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64) 대도시 기초단체를 DDCS, 인구 40만명 이하 기초단체 DDCSPP가 설치되어 있다.

65) Youth Wiki. France 1.3 National youth strategy,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

총리에게 부속된 행정자문위원회인 청소년정책협의회(COJ)는 매년 ‘젊은이들을 위한 향후 몇 년 동안의 주요과제’를 제출하는데 COJ의 구성원은 관련부처장관, 학생단체활동 대표, 지역선교사역대표, 청소년전국연합회장, 두 번째 기회학교네트워크회장, 전국사회 행동연합회장, 전국가족협회연합회장 등 광범위한 영역들이 함께 논의한다.⁶⁶⁾

2) 청소년 지원정책과 청소년 활동⁶⁷⁾

프랑스 청소년들은 11살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학률이 낮아지는데, 이런 재학률을 고려한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 지원정책은 크게 ① 문화여가활동, ② 청년고용 지원정책, ③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세 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문화여가활동’ 지원정책은 지역사회와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청소년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한다. 김경준 외(2018)에 따르면 ‘문화여가활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문화시설기관, 문화제 기관, 지역교육기관, 운송업 등 관련 기관(업체)들의 협력으로 활동에 투자되는 비용의 할인 우대가 다양하게 연결되어있다. 교통비 할인 우대의 경우, 일반적인 청소년 우대정책과 함께 청소년 카드를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은 18세 미만⁶⁸⁾이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바캉스 카드(Le Pass Jeune)는 여름 바캉스 기간 동안 50여 개 문화활동(수영장, 여름페스티벌 등) 입장 시 무료 또는 할인이 된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유로 바캉스를 못가는 걸 고려하여 18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은 바캉스 비용이 최대 150유로 지원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실업가정, 한부모 가정) 가정 청소년 여행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신학기 준비 지원금의 새로운 형태로 초등학생들의 하루 30분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1년 9월부터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50유로 ‘Pass Sport’를 지급하였다.⁶⁹⁾

ki/chapters/france/13-national-youth-strategy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66) Youth Wiki. France 1 Youth Policy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15-cross-sectoral-approach-with-other-ministries>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67) 프랑스 청소년 지원정책은 김경준, 모상현과 송태진(2018) 청소년 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은 ‘Youth Wiki. France’를 참조해서 재구성하였음.

68) 루브르박물관은 EU국가 25세까지 무료입장

69) LE FIGARO(2021.06.24.), Circulaire de la rentrée 2021: un chèque de 50 euros pour payer une activité sportive. https://etudiant.lefigaro.fr/article/circulaire-de-la-rentree-2021-un-cheque-de-50-euros-pour-payer-une-activite-sportive_7069b5f4-d4f5-11eb-bb56-c93fd74ea56a/에서 2022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청소년문화의집’(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MJC)은 1907년 처음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비영리 단체로 주요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콘서트, 연극 등의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고, 시민들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문화, 스포츠활동, 아뜰리에를 제공하기도 한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점이 이후 많은 대중교육시설들의 지침이 되고 있다.⁷⁰⁾ 열린학교(École ouverte)는 휴일이나 방학기간 동안 취약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열린학교는 중도포기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청소년과 청소년 등 다양한 관계에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⁷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역 활동도 촉진하는데, 파리의 에스파스존(espaces jeunes)은 청소년 공간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학업과 사회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16세-25세 청소년에 해당한다.⁷²⁾ 라디오프랑스(Radio France)는 파리의 주요 교향악단인 ‘라디오프랑스’에서 2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⁷³⁾

이밖에도 민-관-기업의 협업, 비영리단체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소년단체활동시설’(Accueil collectif des mineurs)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는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16세 이상 누구나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다(신선미, 2013).

두 번째, ‘청년고용지원정책’은 장기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고용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교육계획 ‘2018-2022 청년고용 그랜드 플랜’은 100만여 명의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용지원에 초점이 있다(김경준 외, 2018).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는데, 파리는 고용포럼(Forums pour l'emploi)과 청소년 직업고용지원협회들(Mozaik RH, Nos quartiers ont des Talents etc.)은 기업연결을 주도하고, ‘두 번째 기회의 학교’(Ecoles de la deuxième

11월 22일 인출.

70) Wikipedia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https://fr.wikipedia.org/wiki/Maison_des_jeunes_et_de_la_culture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71) education.gouv.fr École ouverte. <https://www.education.gouv.fr/ecole-ouverte-4664>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72) 김경준 외(2018). 청소년세대 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p.116.

73) 김경준 외(2018). 청소년세대 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p.117.

chance)는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46개 학교 네트워크가 있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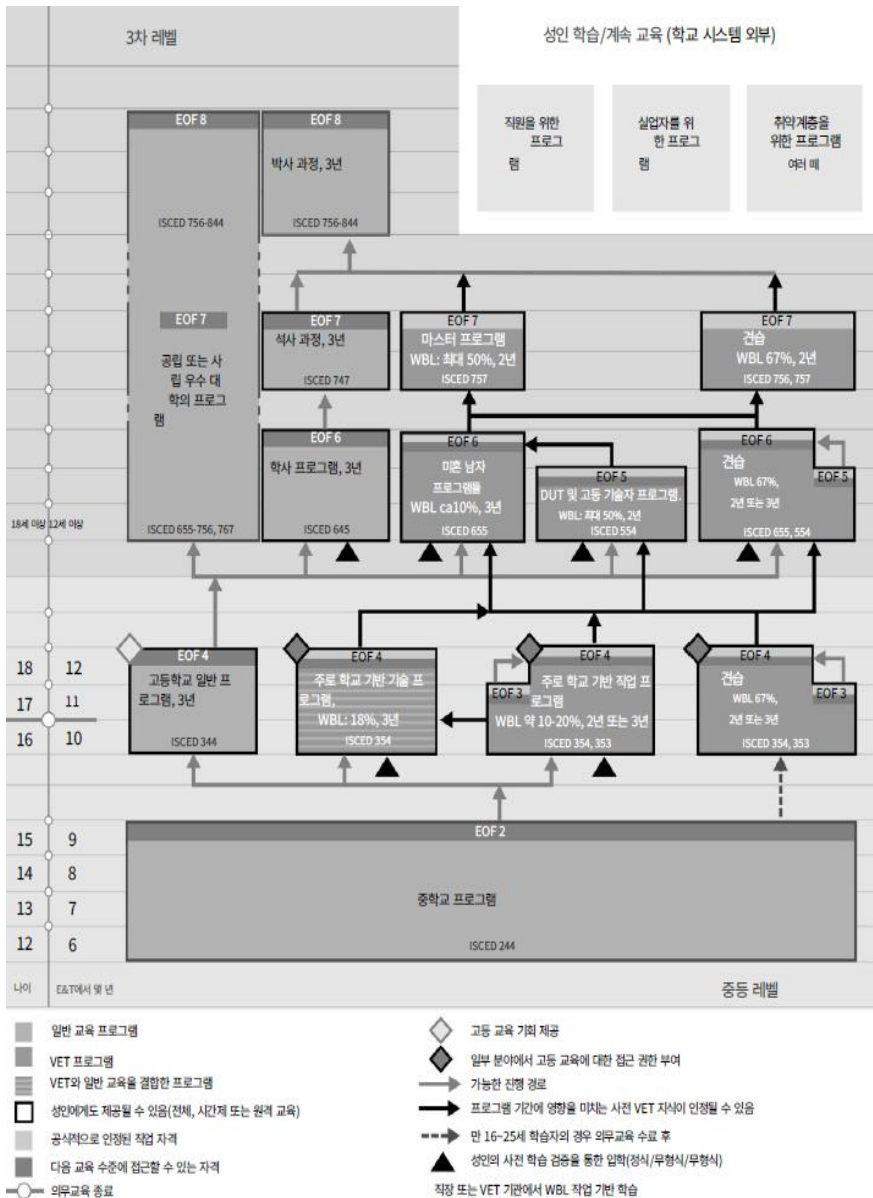
세 번째,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사회 연대성 형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지원정책이 있다. 주거지원정책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주거지원정책에 청(소)년이 포함되는데, 공공임대주택, 기숙사를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되며,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주거수당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소년단체활동시설(Accueil collectif des mineurs)’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참여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는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면 16세 이상 누구나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다.

3) 프랑스 교육훈련

프랑스의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은 국가교육고등교육 및 연구부의 책임 하에 있다. 교육체계 가운데 초등(Ecole primaire)과정은 5년제로 준비과정 1년, 기초과정 2년, 중급과정 2년이다. 하위중등(Collège)은 4년제로 적응과정 1년, 중심과정 2년, 진로과정 1년이다. 중등과정을 마치면 중학교 학력인정국가시험(Brevet)을 본다. 상위중등(Lycée)은 3년 과정으로 일반, 기술, 실업계로 나뉘어진다. 일반계는 문학, 경제·사회, 과학 3계열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술계는 산업, 실험, 사회보건, 식품, 농학, 음악무용, 회계·경영·행정, 호텔·식당서비스 8계열이다. 직업계는 자격증별로 전문과정이 구성되어있다. 1년차 전공탐색 후 전공과정 2년을 마치면 고등학교 학력인정국가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e)를 본다.

74) Youth Wiki. France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출처: 김만국(2019).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최근 변화. p.10
* 원출처: Cedefop(2016). ReferNet VET in Europe reports. p.16

그림 V-8. 프랑스의 정규교육제도와 직업교육훈련 과정

프랑스는 매년 9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위 없이 교육과정에서 이탈한다.⁷⁵⁾ 학업중단으로 인해 청소년 실업이 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정책을 활용하는데, 첫째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의 병행이다. 이 제도는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 노동법에 저촉되므로 15세 이상의 학생들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부모 참여유도이다. 학부모 참관수업, 토론 개최,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시간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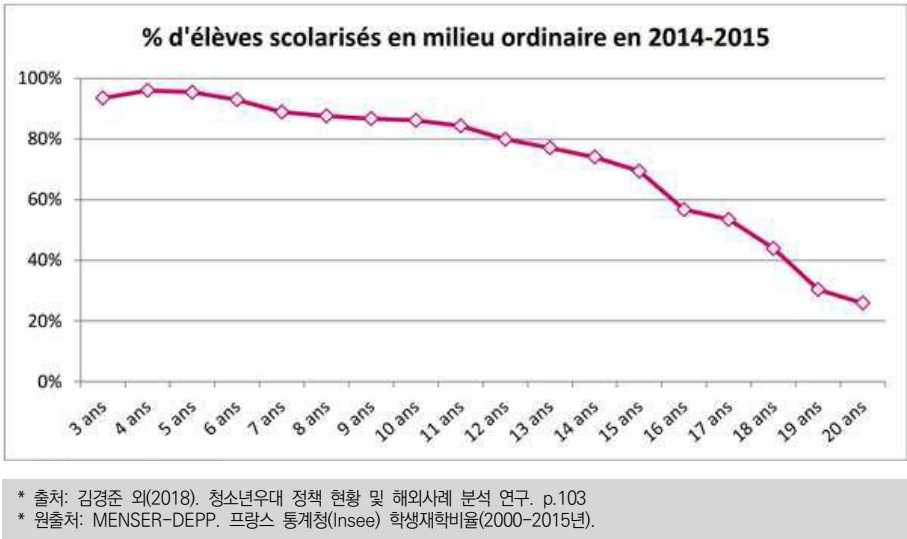


그림 V-9. 청소년 연령별 학령인구 재학 비율(2000-2015)

교육부는 학생들의 중퇴예방이 예방-개입-치유의 세 단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임무를 구성하였다. 2017년 교육부는 중퇴자 1인의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2012년 기준 1인당 23만 유로라는 조사 결과가 중퇴 문제의 중요성을 의미한다는 판단으로 ‘제2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예방, 동반, 연합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모든 관계자, 지자체, 협회 등이 참여한다. 학교중퇴자와의 싸움은 ‘유럽 2020 전략’의 틀 내에서 국가 우선순위이자 문제이다.⁷⁶⁾

75) 프랑스 교육부(2022.10.9.). *Construisons ensemble une école engagée*. <https://www.education.gouv.fr/> /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프랑스의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는데, 2005년 제정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및 기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국민이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의식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특수교육은 일반학교의 일반학습에 배치되는 완전통합 교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부분통합교육,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의료기관(우리나라의 특수교육)에서의 교육으로 나뉜다.⁷⁷⁾ 이러한 장애아동의 배치는 MDPH에 설립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교육을 최우선 고려해서 가장 먼저 일반학급에 배치고려, 부분통합교육, 사회의료기관 순으로 배정된다.⁷⁸⁾

프랑스는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2015년 유치원에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그룹을 30개 추가 신설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연대기금(CNSA), 지방공공기능센터(CNFPT)와 협약을 통해 교육부, 장애인 지역센터, 사회보건서비스기관의 인력, 지역보건센터 인력 등 교육을 운영했다.⁷⁹⁾

2018년에는 ‘자폐증을 위한 2018-2022년 전략’이 발표되었다. 자폐아 중 30%만이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것을 인식하여, 통합적인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의무교육연령을 3세로 낮추고 자폐아동에게도 적용하여 유아시기부터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자폐아동이 일반 유치원에서 생활이 용이하도록 의료, 사회팀이 학급에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심각한 장애를 포함하여 유아자폐교육팀의 인력을 3배로 확대하였다.⁸⁰⁾ 프랑스는 통합학교 확대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데, 2018년 교육부의 1년간의 통합교육정책 결산 발표를 보면 전국 장애네트워크에 담당자를 임명하고 농업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개발하도록 했으며, 고등학교에 통합교육지역유닛(Unites locales d'inclusion scolaire,

76) Education.gouv.fr. La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학교중퇴와의 싸움). <https://www.education.gouv.fr/la-lutte-contre-le-decrochage-scolaire-72140>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77) Education.gouv.fr.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 https://www.education.gouv.fr/bo/17/Hebdo1/MENH1619205C.htm?cid_bo=111226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MDPH(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SMS 장애판정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one-stop장애인 전담기관으로 2005년 법에 의해 창설된 고용·사회연대부 산하 공익단체이다.

78) 이정남 (2013, 가을호). 프랑스 특수교육의 자원체계. <https://www.nise.go.kr/jsp/field/2013-3/10.jsp>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79) 교육정책네트워크(2016.3.30.). 발달장애 혹은 자폐아 학생들을 위한 50개 그룹 추가 개설. <https://edpolicy.v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60860>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80) Education.gouv.fr Stratégie nationale 2018-2022 pour l'autisme : garantir la scolarisation effective des enfants et des jeunes. <https://www.education.gouv.fr/strategie-nationale-2018-2022-pour-l-autisme-garantir-la-scolarisation-effective-des-enfants-et-des-11585>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ULIS)을 250개 신설할 계획으로 2017년 40개, 2018년 48개를 신설하였다.⁸¹⁾ 또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과후 등)에서 통합교육 연속성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김안국(2019)은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초기직업교육훈련과정과 계속직업교육훈련⁸²⁾으로 구분한다.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상위 중등과정에서 고등교육까지 제공된다. 정규직업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기제들이 있는데, 중등교육을 통해 다양한 직업정보, 관련 교육훈련과 업종부문 등의 개별화된 직업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2013년 이후 중학교(6-9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지도이행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교육경력정보센터(Office national d'information sur les enseignements et les professions, Onisep), 청년 정보문서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CIDJ)를 통해 중학교 단계의 일반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교육선택과 그 이행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7년도부터 CAP⁸³⁾에서 BTS⁸⁴⁾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직업을 목표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500개의 새로운 직장 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이 직업훈련은 프랑스 경제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반 교육과 직장 경험 기반으로 하는 직업경로로 매년 거의 70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⁸⁵⁾ 또한 하위 중등과정 4학년의 경우 직업교육준비과정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 여러 다른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81) education.gouv.fr. Ensemble pour l'École inclusive. <https://www.education.gouv.fr/ensemble-pour-l-ecole-inclusive-7277>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82) 계속직업교육훈련은 성인 취업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83) CAP은 EOF3 수준으로 산업과 통상, 서비스부문에 200여개 있으며,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84) BTS는 직업학교(Lycée)의 상위기술과정 교육 수료 또는 바칼로레아 취득자에게 주어진다.

85) Education.gouv.fr. 500 nouvell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 pour les métiers d'avenir(미래 직업을 위한 500개의 새로운 직업 훈련 과정). <https://www.education.gouv.fr/500-nouvelles-formations-professionnelles-pour-les-metiers-d-avenir-6389>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5. 소결

독일은 당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청소년전략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정부기관 간, 정부와 NPO 간 협력이 이뤄지고,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보다는 부문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세 가지 핵심과제-청소년들의 삶의 기술 습득,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 찾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중심으로 모든 부문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실행한다. 교육부문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주요 정책은 학교조기포기방지, 학교에서 직장까지 교육연결계획, 예비직업조치, 청소년강화 계획, 학교사회사업 등을 포함하며, 정부 이외에 지역자원을 통한 조기이탈방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독일은 특수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포용교육에 중점을 두며, ‘다양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들이 여러 청소년복지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며, 이는 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 전환된 후에 취업의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과 진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핀란드는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청소년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이 범정부적인 ‘국가청소년활동 및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립된다. 2010년에 개정된 기초교육법은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장애 상태에 따라 일반지원(다양성), 집중지원(위험에 처한 학생), 특별지원(포용적 학급이나 특수학급/학교에서 전일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지원을 점차 강화하였다. 핀란드의 특수교육 관련 정책은 1968년 종합학교 개혁에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에는 ‘이웃학교’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노르웨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핵심적 요소는 ‘참여’로, 청소년은 관련 업무프로세스에 밀접하게 참여한다. 교육개혁을 통해 청소년이 의무교육 이후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을 강화하였고, 역량개혁을 통해 기술, 자격 및 경험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확보 및 추가적인 교육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조기퇴학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교육성취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청소년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0-24협력’ 프로젝트가 2015년에 시행되었다. 특수교육법이 폐기되고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폐교되었으나 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모든 부처와 사회구조에 반영됨에 따른 결과이다.

프랑스에서 청소년의 재학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 청소년 지원정책은 이를 고려해 문화여가활동, 청년고용 지원정책,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으로 구분된다. 특히, 청년고용 지원정책은 장기적인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용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고용포럼을 개최하거나 기업과의 연결을 주도하며, '두 번째 기회의 학교'를 통해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 사회통합정책은 사회연대성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낮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반주택 거주 대학생에게 주거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을 병행하며, 학부모 참관수업, 토론회 개최,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시간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한다. 프랑스의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지향하며,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및 기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의식을 구체화하였다.

○———— 제6장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3. 향후 과제

1. 연구결과 요약

1)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의 산정

관련 법률이나 선행연구 등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은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가정 및 가구구성에 의한 요인, 학교요인, 지리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해 정의 및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 가구원 가운데 장애가 있는 가정 내 청소년, 주양육자의 학력수준이 낮은 가정 내 청소년 등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정의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2% 표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만8~23세 청소년은 7,529,646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76,036명의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에 속한다.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청소년은 16.0%에 해당하는 1,206,805명이며,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15.3%에 해당하는 1,151,613명에 이른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육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자폐성 장애, 언어장애 가운데 하나라도 지니고 있는 만8~23세 청소년은 486,486명으로 해당 연령대 청소년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은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점유하는 주택의 거주층이 (반)지하 혹은 옥상(옥탑)에 해당하거나 점유형태가 월세 혹은 사글세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되며, 1,367,760명(18.2%)이 이에 해당한다. 만8~23세의 청소년 가운데 농촌지역(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45,699명으로 0.6%에 해당한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장애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86,125명(1.1%),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1,732명(2.5%),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경우는 190,369명(2.5%)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가

정에 속하는 경우는 20,118명(0.3%),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경우 42,749명(0.6%),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속하는 경우 20,151명(0.3%)으로 나타난다. 장애가정에 속하면서 저소득가정인 가구 내 청소년은 97,006명(1.3%)에 해당하고, 장애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가구 내 청소년은 80,971명(1.1%)에 이른다. 저소득가정이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346,739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4.6%를 차지한다.

2) 취약성 진단

학업성취에 있어, 저소득가정과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투자에서의 격차에 기인한다. 연간 교육비 지출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429만원만큼 적으며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5.1%p만큼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진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은 만족의 정도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경우 분석자료 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한편, 장애가정 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이 느끼는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교생활에서의 낮은 만족도는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중단 경험이나 의향을 갖도록 한다.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 있어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아, 교육격차가 이들의 주관적 웰빙에도 영향이 있음을 함축한다.

3) 정책의 평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서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있어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해당 정책에 대한 잠재적 수혜자들에 의한 인지로부터 시작됨을 고려할 때, 정책의 낮은

효과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취약성 진단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높은 학업중단 경험 및 의향은 이들이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복지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나타냄을 함축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소년의 이들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교육 관련 정책들-이를테면,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교과목 학습지도, 무료 방문학습지, 특기적성 교육, 현금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진로 프로그램(상담, 체험활동, 캠프 등)-은 상대적 취약성이 보다 높은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에게서 높은 수혜율을 나타내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들 가운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수혜율과 달리 해당 지원 서비스들에 대해 체감하는 도움의 정도가 농산어촌 거주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에게 높지는 않아 교육격차의 실질적 해소에는 한계를 보인다.

학교 혹은 관련 기관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정책 수혜 전후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를 통해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업성취 향상의 효과가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의 교육부문 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계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다 효율적인 혹은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이나 실행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와 이들의 상대적 취약성이 보다 명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더불어, 정책이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연차별 성과가 평가되고 평가의 결과가 차년도 정책의 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특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자료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통계청에서 그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청소년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는 산재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자료의 생성 및 유지를 위한 별도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방과후활동 수요 및 현황조사 등 청소년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개방과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자료에 대한 이용자-특히,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에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형 혹은 비정형의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성운숙, 2021).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단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자료들 간 중복된 항목의 조사일 것이다. 예를 들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만일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중복된 항목들에 대해 조사 간 차별화를 통해 세분화된 문항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충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나 역할이 조사자료의 상호 개방과 연계 혹은 자료 간 조정과 같은 통계자료에 국한되기 보다는 관련 정책제언이나 사업에 대한 제안들을 정책데이터뱅크의 형태로 구축 및 관리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자, 정책입안자, 정책시행자 혹은 일반 국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 혹은 사업이 증거에 기반함을 제시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⁸⁶⁾ 이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주요 청소년정책 이슈별 부가조사 실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청소년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는 자료들이 있으나 조사항목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사 시점 간 조사항목들에서 변화가 적은 편이다. 이는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사가 시기별 이슈들을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노동패널이나 주거실태조사와 같이 해당 분야의 시기별 주요 이슈나 정책과

86) 김양중, 임준홍, 이관률, 이만정과 김영수(2021)는 충남을 사례로 통계자료 및 정책데이터뱅크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관으로 충남정책데이터연구센터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관련하여 기존의 조사결과를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정책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용하거나 해당 이슈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청년’, ‘건강과 은퇴’, ‘중고령자’, ‘근로시간과 여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고용형태’, ‘교육’, ‘시간사용과 삶의 질’, ‘삶의 인식’, ‘비임금근로자’ 등을 주제로 해당 시기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주제로 하는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의 수립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실증분석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나, 저소득가구,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 장년가구, 노인가구, 시설거주노인, 장애인가구, 시설거주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를 통해 관련 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격차에 대한 증거-기반 연구는 교육생산함수를 기반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서의 계층 간 차이, 관련 정책의 평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등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기존 통계는 이를 위한 극히 일부의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통계자료에서 조사 풀(Pool)을 대상으로 시기별 이슈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 개선과 장기 효과의 측정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약계층 청소년이 교육 관련 정책을 수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한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해당 정책의 수혜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으로 낙인찍히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되 해당 청소년이 아닌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지원의 실행에 있어서도 해당 지원사업의 수혜 여부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참여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격차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슈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격차가 해당 개인의 삶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생애에 걸친 장기적 분석의 결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의 추진이 일반 국민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

격차의 부정적인 영향이 실증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의 장기 효과 역시 실증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영향은 수혜자 개인의 생애소득, 취업 등과 같이 개인적인 영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영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력수준이 향상되고 이는 해당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취업이나 임금 혹은 소득에 있어 보다 나은 개인적 성과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적자본의 증가를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일탈경험에 대한 가능성을 낮춰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낳는다. 낮은 교육수준이 반드시 바르지 못한 인생경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음을 전제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혹은 완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특정 계층을 위한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 증가-이를테면, 고용이나 인적자본의 증가 및 이를 통한 노동생산성과 국민총생산의 증대,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한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함축할 것이다.

4) ‘공평’이 아닌 ‘공정’

청소년기는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학습기회가 단순히 공평의 개념에서 제공되기 보다는 공정의 개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이라 함은 취약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동일선상에서 학습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공정의 개념은 취약성에 기초하여 이들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이 처한 여건이나 상황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가족이나 가구의 구성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은 청소년의 선택권 밖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은 공정한 출발점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혹은 완화는 해당 청소년 개인의 복지나 후생의 증가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책기조로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5) 위기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대안 모색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은 위기에 이르는 원인과 위기가 닥쳐온 시기(연령대), 그리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역량(내적인 힘), 그리고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 중국적으로 자립을 시킬 준비를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살아갈 공간과 이들의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호자나 보호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의 양육 의지가 있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안전한 생활공간과 영양이 충분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체계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적인 목표는 아동의 경우 교육 경로로 복귀하는 역량을 형성하도록 도와 이들이 교육적 과정-학교나 대안학교 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정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중국적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첫째, 위기 청소년 대상을 위한 장기적 지원 방향-2대 경로-교육경로와 노동시장경로를 결정한 판단을 위한 기초 정책들이 필요하다. 위기 상태의 아동 청소년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판단을 하고 청소년과 함께 한 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상태나 자발성 동기 등에 따른 심리상담과 상처를 치유할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 개별적 상태-건강, 심리, 치유가 필요한 상처, 본인의 내적 동기와 의지 등 종합적인 판단을 기초로 개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지속하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교육기관(경로)으로부터 실패하고 이탈하기 전에 보다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의 교사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가 경제적 심리적 가정적 위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조기에 개입하거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고 이를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상호협력과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위기 청소년의 진단과 파악 및 조기 발견과 예방은 학교와 교육에서 실패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 경로를 통한 해결책이 있다. 일정한 연령에 이른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적극적 정책이 될 것이다. 이는 노동부와 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부처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독자적으로 위기 청소년의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 이 있다면 이들 가족과 보호자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협력이 가능한 경우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불안전하고 위험한 주거공간이나 빈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재정지원-예를 들어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청소년 집중지원-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경우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가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해줄 어른들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경로를 위한 정책-어린 청소년의 경우 교육경로(교육 체제-학교 체제)로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앞서 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회복력을 복구하였을 때 교육 체제나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사립의 대안학교나 도제수업 등 직업훈련도 가능하다면 실시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가 이들 위기 청소년들과 사전에 연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청소년들이 학교 내의 정착을 탐색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위한 지역별(기초 자치단체나 동네별로) 지역 청소년 활동센터 같은 것이 있어 이들 청소년과 학교 안의 청소년들이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학교로의 복귀를 목표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교육공동체 등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등의 네트워크 체제를 활용하고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학습력(교육) 회복경로라는 이 경로는 위기 청소년의 주류화이다. 주류화는 특수교육에서도 활용되는 용어이나 교육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학교 체제나 교육 체제로 회복시키는 장기적인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기초학력보장법 등의 시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보장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이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위기 청소년 위기 탈출 경로 정책이 필요하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가장 최선의 길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통한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일자리에서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청소년들 중에는 기초적인 직업훈련이 없거나 일거리를 찾을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직업교육훈련은 직업학교, 직업계열 고등학교, 폴리텍, 전문대학교,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 등이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으로 이들이 일정한 회복을 한 후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산재된 노동부의 산하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과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잘 정착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 독립생활을 꾸려 가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다섯째, 스포츠, 예술 활동, 하이킹과 캠핑 등 자연친화 활동 등을 청소년들이 활동 중심으로 자신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적인 삶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위기 청소년들에게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내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예술문화단체들이나 기관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종합청소년 활동센터 같은 기관을 두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언제 어떤 경로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를 도와줌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잠재적 가능성과 힘 그리고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기초지자체)차원에서 각 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던 경험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경험을 서로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과제

1) 교육격차의 장기 영향 추정을 위한 분석틀 마련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학업성취나 희망 교육수준 등 교육격차의 단기적 영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의 당위성은 이러한 교육격차를 통한 장기 영향에서도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청소년 교육격차의 장기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테면, 청소년 대상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존재하나 이들의 교육격차로 인한 장기적 영향-예를 들면, 성인이 되어서의 임금수준 등-을 추정하기 위한 장기 패널자료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교육격차의 장기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통계자료가 구축 및 관리되어야 하며, 어느 정책(사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며, 어떻게 교육격차 이외의 요인들(counterfactuals)을 통제할 것인가 등과 같은 고민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청소년 대상 정책이나 사업들 가운데 예산의 규모 혹은 중요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의 구축 및 평가를 통해 사전 혹은 사후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 그리고 그 결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 간 충분한 협업이 전제되지 않는 한,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정책의 수립이나 실행 단계에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의 결과가 정책의 수립이나 실행 단계에 환류(feedback)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관들 간 상호 연계의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실천사항과 협조사항, 행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협업을 위한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한나, 박혜원 (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613-622.
- 교육정책네트워크 (2016.3.30.). 발달장애 혹은 자폐아 학생들을 위한 50개 그룹 추가 개설.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5&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60860>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구인회, 김정은 (2015).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사회복지정책** 42(3), 27-49.
- 김경준, 모상현, 송태진 (2018). **청소년우대 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연구보고 18-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상훈 (2017.12.20.). 핀란드의 특수학교 운영과 지역공동체 역할.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816704>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 김성식 (2020). 교육부 내부 발표자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복지 정책, 전망과 과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6차 대화: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 김성아 (2022). 취약계층 청년 - 범위와 정책, 그리고 함의. 2022 다문화청소년종단연구 콜로키움(2차) 발표자료.
- 김안국 (2019).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최근 변화. **THE HRD REVIEW**, 22(3), 8-27.
- 김양중, 임준홍, 이관률, 이민정, 김영수 (2021). **충남연구원 데이터뱅크 구축방안(정책 아이디어 구축을 중심으로)**. 충남: 충남연구원.

- 김영란, 김민정 (2016). 가족의 기능적 변인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0(1), 45-86.
- 김영은, 엄명용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5-30.
- 김영철 (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정책연구시리즈 2011-06).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용진 (2017, 4월호). 모두를 위한 독일의 통합교육.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7523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김지연, 김희진 (2018).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연구보고 18-R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미, 문혜진 (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한국인 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도종수 (2005).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지역격차 실태와 대책. **청소년학연구**, 12(4), 305-334.
- 류정순 (1998).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한국사회정책**, 5(1), 194-229.
- 마강래, 강은택, 임보영 (2016). **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16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민전순 (2013).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세미나자료집 13-S4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김성식, 김위정, 하봉운, 한금영 (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연구보고 RR2017-07).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브란델부르크주교육부 (2022.7.19.). Programm „Türöffner“ zur Unterstützung von Jugendlichen am Übergang Schule-Beruf wird verlängert. <https://mbjs.brandenburg.de/aktuelles/pressemitteilungen.html?news=bb1.c.741270.de>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서현수 (2021). **[핀란드] 미래를 대표하기(Representing the Future):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 성윤숙 (2021). 뉴노멀시대의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방안. **지능정보윤리 이슈리포트**, 2(2), 35-42.
- 신선미 (2013).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자료집 13-S29), 33-65.
- 윤상원 (2012). 비마이너 홈페이지. 2012.11.14. ‘시설없앤 노르웨이, 통합은 현재진행형’.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8>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이덕난 (2013). 노르웨이의 교육행정과 교육복지. **비교법 현안분석**, 4, 53-67.
- 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아동학회지**, 12(1), 113-128.
- 이시효 (2020).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교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0(4), 172-207.
- 이정남 (2013, 가을호). 프랑스 특수교육의 자원체계. <https://www.nise.go.kr/jsp/fielld/2013-3/10.jsp>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 장수명 (2015). 핀란드 학교의 학생자원과 개인별 학습 교육계획. **교육정책연구**, 2, 33-69.
- 정미라, 곽은순, 윤장숙 (2007).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아동의 양육 실태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47-369.
- 정수정 (2018, 가을호). 장애/비장애 학생의 동등한 교육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독일: 장애는 다름의 하나. <https://webzine-serii.re.kr/%EC%9E%A5%EC%95%A0%E B%B9%84%EC%9E%A5%EC%95%A0-%ED%95%99%EC%83%9D%EC%9D%98-%EB%8F%99%EB%93%B1%ED%95%9C-%EA%B5%90%EC%9C%A1%EA%B6%8C-%EC%8B%A4%ED%98%84%EC%9D%84-%EC%9C%84%ED%95%B4-%EB%85%B8%EB%A0%A5/>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정익중 (2011). 초중고 사교육비의 사회계층적 예측요인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 73-99.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정정길, 이시원, 정준금, 권혁주, 김성수, 문명재, 정광호 (202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조정래 (2021). 코로나 19는 청소년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불리한 청소년의 학습, 심리/정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75-98.
- 최돈민, 윤여각, 현영섭, 강대중, 이세정 (2013). 가족구조가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1(4), 119-153.
- 최필선, 민인식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31-56.
- 프랑스 교육부 (2022.10.9.). Construisons ensemble une école engagée. <https://www.education.gouv.fr/>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함부르크 (2021.02.12.). Viele Schulabgänger schaffen den Übergang in Ausbildung und Beruf. <https://bildungsklick.de/schule/detail/viele-schulabgaengerinnen-und-abgaenger-schaffen-den-uebergang-in-ausbildung-und-beruf>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 현지영, 김경근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분석: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5(2), 125-154.
- 현장특수교육 (2010). 제17권 여름호, 톡톡톡 '독일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현황과 과제' <https://www.nise.go.kr/jsp/field/2010-2/04.jsp>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 Bankston, C. L., & Zhou, M. (1995). Effects of Minority-Language Literac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Vietnamese Youths in New Orleans. *Sociology of Education*, 68(1), 1-17.
- bildungsketten.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die-initiative/die-initiative>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bildungsklick (2022.4.22.). Benachteiligte Jugendliche besonders unterstützen. <https://www.km.bayern.de/pressemitteilung/12122/nr-049-vom-22-04-2022.html>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bildungsklick (2022.8.29.). Hamburg startet neues Sprachförderprogramm für Kinder. <https://bildungsklick.de/schule/detail/hamburg-startet-neues-spra>

- chfoerderprogramm-fuer-kinder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Chin, J.M., & Yu, S. (2008).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Immigrant Mothers in Taiwa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8): 1141-1152
- Education.gouv.fr Stratégie nationale 2018-2022 pour l'autisme : garantir la scolarisation effective des enfants et des jeunes. <https://www.education.gouv.fr/strategie-nationale-2018-2022-pour-l-autisme-garantir-la-scolarisation-effective-des-enfants-et-des-11585>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Education.gouv.fr. 500 nouvell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 pour les métiers d'avenir(미래 직업을 위한 500개의 새로운 직업 훈련 과정). <https://www.education.gouv.fr/500-nouvelles-formations-professionnelles-pour-les-metiers-d-avenir-6389>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Education.gouv.fr. La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학교중퇴와의 싸움). <https://www.education.gouv.fr/la-lutte-contre-le-decrochage-scolaire-7214>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Education.gouv.fr.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 https://www.education.gouv.fr/bo/17/Hebdo1/MENH1619205C.htm?cid_bo=111226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Jahnukainen, M. (2022.9.30). 핀란드의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과 특수교육 개발. **2022 충청권 교육정책포럼: 기초학력 지원의 새로운 접근**, 27-46.
- Maria, W., Blomquist, C., Hug, R., Kovacs, E., Williamson, H., & Lauritzen, P. (2004). Youth policy in Norway.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MERCATOR INSTITUT (2022.8.10.). Sprachliche Bildung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Metavorhaben startet. <https://www.mercator-institut-sprachfoerderung.de/de/aktuelles/meldung/2022/sprachliche-bildung-in-der-einwanderungsgesellschaft-metavorhaben-startet/>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홈페이지. Youth work centres of expertise and National youth centres. <https://okm.fi/en/national-youth-centres>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홈페이지. Youth work. <https://okm.fi/en/you>

- th-work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Shaffer, D.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Pacific CA: Brook Cole Publishing Company.
- Statistisches Bundesamt (2018). Nachhaltige Entwicklung in Deutschland - Indikatorenbericht 2018.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Nachhaltigkeitsindikatoren/Publikationen/Downloads-Nachhaltigkeit/indikatoren-0230001189004.pdf;jsessionid=4931411E0629EA0F33CABDE99387C0D7.live731?__blob=publicationFile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Vieno, A., Santinello, M., Pastore, M., & Perkins, D. (2007).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in School, and Self-efficiency As Resourc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 Integra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 177-190.
- Weber, S., Kronberger, N., & Appel, M. (2018). Immigrant Students' Educational Trajectories: The Influence of Cultural Identity and Stereotype Threat. *Self and Identity*, 17(2), 211-235.
- bildungsketten.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die-initiative/die-initiative>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Deutsche kinder-und jugendstiftung. <https://www.dkjs.de/themen/alle-programme/erfolg-macht-schule/>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 education.gouv.fr École ouverte. <https://www.education.gouv.fr/ecole-ouverte-4664>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education.gouv.fr. Ensemble pour l'École inclusive. <https://www.education.gouv.fr/ensemble-pour-l-ecole-inclusive-7277>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Federation des acteurs de la solidarite(연대행위자연맹) (2013.02.25.)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 A QUAND UNE VÉRITABLE POLITIQUE GLOBALE DE LA JEUNESSE? <https://www.federationsolidarite.org/actualites/comite-interministeriel-de-la-jeunesse-a-quand-une-veritable-politique-globale-de-la-jeunesse/>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Unterricht und kultus(바이에른 주 교육문화부)

- (2022.03.24.). Bayern setzt die erfolgreiche Zusammenarbeit mit dem Bund in der 'Initiative Bildungsketten' bis 2026 fort. <https://www.km.bayern.de/pressemitteilung/12105/bayern-setzt-die-erfolgreiche-zusammenarbeit-mit-dem-bund-in-der-initiative-bildungsketten-bis-2026-fort.html>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 LE FIGARO (2021.6.24.). Circulaire de la rentrée 2021: un chèque de 50 euros pour payer une activité sportive. https://etudiant.lefigaro.fr/article/circulaire-de-la-rentree-2021-un-cheque-de-50-euros-pour-payer-une-activite-sportive_7069b5f4-d4f5-11eb-bb56-c93fd74ea56a/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Youth Wiki. Finland 6. Education and Training.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61-general-contex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Youth Wiki. France Overview.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overview>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Youth Wiki. France 1 Youth Policy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15-cross-sectoral-approach-with-other-ministries>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Youth Wiki. France 1.3 National youth strategy.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13-national-youth-strategy>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Youth Wiki. France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rance/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Youth Wiki. Germany Overview.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overview>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Youth Wiki. Germany.1.Youth Policy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youth-policy-governance>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Youth Wiki. Germany 1.1 Target population of youth policy.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1-target-population-of-youth-policy>에서 2022년 11월 21일 인출.

Youth Wiki. Germany 1.3 National youth strategy.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3-national-youth-strategy>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Youth Wiki. Germany 1.4 Youth policy decision-making.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14-youth-policy-decision-making>에서 2022년 10월 19일 인출.

Youth Wiki. Germany 3.2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32-administration-and-governance>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Youth Wiki. Germany 6.1 General contex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1-general-contex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Youth Wiki. German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german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Youth Wiki. Norway 6.1 General contex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orway/61-general-contex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Youth Wiki. Norway 6.3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orway/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Youth Wiki. Norway 10.2.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of youth work,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norway/102-administration-and-governance-of-youth-work>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Wikipedia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https://fr.wikipedia.org/wiki/Maison_des_jeunes_et_de_la_culture에서 2022년
11월 22일 인출.

○ — 부 록

부 록

1. 분석에 이용된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

1)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세 번 이상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이용하며, 증도에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한다.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 이후 1년 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4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8년(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다.

표 A1.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표본의 1차 조사와 4차 조사 기초통계

구분		1차	2차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		55.1	45.2
전국모의고사 성적 비율		45.35	42.83
취약계층 비중		13.4	17.5
거주지별 비중	동지역	86.7	87.4
	읍지역	7.2	6.9
	면지역	6.1	5.7
주택점유형태	자기집	69.4	76.1
	전세	21.6	16.6
	월세	5.8	4.6
	무상	1.1	1.5
	사택	1.7	0.7
	임대	0.4	0.5
	복지시설/관사	0.0	0.1

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표 A2.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8년)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18년 8월 ~ 10월
조사대상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한부모 2,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주기	3년 주기
기준시점	2018년 8월
표본설계	- 표본틀 : 통계청의 「2019년 동록센서스」에서 파악된 한부모가구의 지역별, 가구유형별 및 분포 활용 - 표집방법 : 지역, 가구유형에 따른 층화추출
조사목적	전국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표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수치 및 기초근거자료를 제공함
조사내용	- 9개 분야/20개 항목/132개 세부항목 - 자녀 돌봄,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경제활동, 건강, 소득 및 지출,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등
조사기관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 전담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작성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표 A3.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8년)에서의 한부모가족 유형

유형	질문지 상 구분	설명	조사 대상
모자 가족	모(본인)+자녀	본인(모)과 본인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모(본인)+자녀+본인의 형제/자매	본인(모)과 본인의 형제자매, 18세 미만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모(본인)+자녀+조부모	본인(모)과 본인의 부모(자녀의 조부모), 18세 미만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모(본인)+자녀+기타	본인(모)과 본인의 자녀 이외에 본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혈연 및 비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자 가족	부(본인)+자녀	본인(부)과 본인의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본인)+자녀+본인의 형제/자매	본인(부)과 본인의 형제자매, 18세 미만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본인)+자녀+조부모	본인(부)과 본인의 부모(자녀의 조부모), 18세 미만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적격
	부(본인)+자녀+기타	본인(부)과 본인의 자녀 이외에 본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혈연 및 비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적격
조손 가족	조부 또는 조모(본인)+자녀	자녀의 모 또는 부가 없이, 조부 또는 조모 한쪽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부적격
	조부모(본인)+자녀	자녀의 어머니 또는 부가 없이, 조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	부적격
기타 가족	기타	1인 가족, 배우자와 응답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배우자와 응답자가 따로 거주하지만 경제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기러기 부부 등) 등	부적격

* 출처: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표 A4.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8년) 표본의 분포

구분		비중(%)
한부모 연령	30대 이하	25.2
	40대	56.6
	50대 이상	18.3
한부모 학력	중졸 이하	7.3
	고졸 이하	59.6
	대학 이상	33.1
한부모가 된 기간	5년 미만	31.2
	5~10년 미만	40.9
	10년 이상	28.0
정부의 저소득지원 가구 해당 여부		46.6

3) 사회조사

표 A5. 사회조사(2020년)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0.5.13.~5.28.
조사대상	약 27,336 표본가구의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1,548개 조사구, 조사구당 16~20가구)
조사방법	면접조사
조사주기	1년
기준시점	2020. 5.13. 기준
표본설계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 조사구(1, A) - 일반 조사구 중 조사가 어려운 섬지역과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은 제외 - 표본추출틀의 포함률은 조사모집단 대비 전국 기준 조사구 99.8% 수준임 - 27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
조사내용	-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 (짝수년)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홀수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노동 - 2018년 : 기본항목(16), 보건(15), 교육(22), 안전(9), 가족(20), 환경(9) - 2020년 : 기본항목(16), 건강(12), 교육과 훈련(23), 범죄와 안전(10), 가족(16), 생활환경(9), 기타(1)
조사체계	조사대상 → 지방통계청 → 통계청

4)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표 A6. 초·중고 사교육비조사(2019년)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조사기준년도 5~6월 및 9~10월 기간 중 (22일간)
조사대상	개인 *1·2차 독립표본 - 약 3,000 학교 방과후교사, 약 3,100 학급의 학부모 약 80,000명, 약 1,400 학급의 담임교사
조사방법	인터넷조사
조사주기	1년
기준시점	조사기준년도 3~5월, 7~9월
표본설계	* 표본추출틀 : 교육통계정보센터 학교DB - 제외조건(폐교 및 휴교,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10명 미만인 학교) * 표본추출방법 : 층화2단 집락추출 * 층화 - 학교급 : 4개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및 특성학교) - 지역층 : 34개 지역 · 서울, 경기(3개 지역층),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도(2개 지역층) * 제외조건(도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10명 미만인 학교, 학교급별 해당 학년의 학급수가 0인 학교)
조사내용	- 학부모(27개) : EBS교육방송, 어학연수, 진학희망 고등학교 유형 및 대학 전공 영역, 사교육(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 사교육(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취업목적), 사교육(진로, 진학 학습상담), 인적사항 및 가구 소득 - 담임교사(1개) : 학생성적(고등학생만 작성) - 방과후교사(5개) : 참여여부, 시간, 교육비 납부여부, 교육비, 수강과목
조사체계	조사대상 학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표 A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2019년) 표본의 분포

구분	집단	비중(%)
지역	서울	13.5
	광역시	30.3
	중소도시	34.7
	읍/면지역	21.6
학교급	초등학교	27.2
	중학교	26.7
	일반고	38.1
	특성화고	8.0
성별	남학생	51.7
	여학생	48.3
출생순위	1	49.2
	2	39.9
	3	9.5
	4	1.1
	5	0.2
월평균 가구소득	2백만원 미만	7.7
	200~300만원 미만	13.1
	300~400만원 미만	17.0
	400~500만원 미만	17.5
	500~600만원 미만	15.7
	600~700만원 미만	8.8
	700~800만원 미만	6.3
	800만원 이상	14.0

표 A8. 성향점수매칭을 위한 이항로짓모형 추정 결과 : 초중고 사교육비조사(2019)

	저소득가정		조손 가정		농촌 거주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지역(준거집단 : 서울)						
광역시	0.223	4.15	-0.061	-1.20		
중소도시	0.155	2.90	-0.036	-0.72		
읍/면지역	0.500	9.21	0.052	1.01		
조손 가정	2.631	81.39			0.090	2.87
저소득가정			-0.756	-71.33	-0.129	-27.58
학교급(준거집단 : 초등학교)						
중학교	0.047	0.91	0.611	11.56	0.632	18.49
일반고	-0.128	-2.54	0.556	10.82	0.569	17.20
특성화고	0.469	7.81	1.073	18.27	0.976	23.76
여학생	0.133	4.46	-0.039	-1.38	-0.021	-1.18
총 자녀수	0.115	4.63	-0.705	-26.50	0.282	18.70
출생순위(준거집단 : 첫째)						
둘째	0.002	0.06	0.125	3.78	-0.075	-3.74
셋째	0.312	5.46	0.700	11.47	-0.016	-0.45
넷째	0.649	5.30	1.390	10.22	0.044	0.54
다섯째	1.129	4.65	2.110	7.16	-0.055	-0.29
여섯째	-0.317	-0.49	3.133	5.78	-1.218	-2.80
일곱째	1.184	1.20	4.979	5.40	-2.345	-2.12
여덟째	2.279	1.60				
상수항	-3.782	-45.94	0.934	11.06	-2.131	-42.42
Pseudo R ²	0.1728		0.2209		0.0355	
관측수	75,314		75,312		75,312	

5)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A9.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 면접조사 기간 : 3월말~4월중 - 인터넷조사 기간 : 4월초
조사대상	○ 전국 약 20,000가구(2019년부터 금융, 복지부문 통합) ○ 시도별 자산비중을 고려하여 목표 RSE를 설정하여 표본규모 확정 -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북 : 4.5~5.5% -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경북, 제주, 세종 : 5.5~7.0% - 그 외 지역 : 8.0~9.5%
조사방법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조사주기	1년
기준시점	- 가구구성, 자산 및 부채 : 조사년도 3월 31일 - 소득, 지출, 원금상환액 및 이자지급액 :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표본설계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특성번호 "아파트(A)", "보통(1)"에 해당하는 조사구에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반영하여 표본틀 구성 - 단, 실제 조사가 곤란하거나 일반적 특징을 갖지 못하는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등은 제외 ○ 추출틀 - 2015 인총 + 매년 등록정보 갱신 - 5개 동질적 그룹으로 모집단 분할·관리 ○ 표본규모 - 전체 2,225개 조사구(매년 445개) * 세종시 45개 조사구 추가 ○ 층화 : 시도×(동/읍면)×주택유형(일반/아파트/대형): 68개층(세종시 추가) ○ 분류지표 : ①공시지가 ②가구원수 ③입주형태 ④전용면적/주택유형
조사내용	- 가구구성(가구주 및 가구원), 자산(실물자산, 금융자산, 금융자산운용, 부동산운용), 부채(금융부채, 부채상환능력), 소득, 가계지출(경상이전지출, 주유지출), 노후생활, 기타(패널관리)등
조사체계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작성근거	통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표 A10.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변수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도권	0.347	0.476	0	1
여성	0.104	0.305	0	1
연령	47.978	6.788	23	87
가구원수	3.992	0.836	2	7
초중고 자녀수	1.656	0.673	1	5
대학생 자녀수	0.261	0.523	0	3

6)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표 A11.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매5년 11.1~익년 12월(표본)
조사대상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
조사방법	가공통계
조사주기	5년
기준시점	매5년 11월 1일 0시 기준
표본설계	
조사내용	- 인구: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 연월, 교육 정도, 교육 영역,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아동 보호, 활동 제약, 활동제약 돌봄,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 장소, 혼인 상태, 혼인 연월, 출산 자녀 수, 자녀 출산 시기, 추가 계획 자녀 수,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 단절, 사회 활동, 생활비 원천 - 가구: 가구 구분,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반려(애완)동물, 마시는 물, 소방시설 보유 여부, 사용 방 수, 주거시설 형태, 난방시설, 주차장소, 건물 및 거주층, 거주 기간, 주거 전용·영업 겸용 여부, 점유 형태, 임차료, 타지 주택 소유 여부 - 주택: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총방수, 주거시설 수
조사체계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작성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10.26. 일부개정)

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표 A12.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년) 개요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20년 10월
조사대상	- 조사모집단 : 만 9~24세 한국 청소년 및 주양육자 - 전국 5,078가구 - 청소년(9~24세) 7,676명 - 주양육자 5,078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조사주기	3년
기준시점	최근 1년, 지난 1주일
표본설계	- 표본추출틀 : 2018년 등록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 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층화집락추출
조사내용	- 청소년용 : 건강, 사회문화, 가정생활 및 가족관, 사회관*, 학교생활 및 방과후, 진로*, 학업중단*, 직업 및 직업관*, 응답자 특성, 대학입학 이후* 등 10개 영역 51개 문항 (*만13~24세 조사항목) - 주양육자용 : 양육, 생활환경, 가구 및 응답자 특성 등 3개 영역 17개 문항
조사기관	조사대상 → 위탁기관 → 여성가족부

표 A13. 성향점수매칭을 위한 이항로짓모형 추정 결과 :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년)

	추정계수	t-값
여성	-0.126	-0.88
연령대 (기준 : 9-12세)		
13-18세	-0.735	-2.05
19-24세	-1.335	-1.73
주양육자 학력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1.389	-3.54
고등학교	-0.600	-2.75
지역규모 (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0.098	-0.61
농산여촌	-0.189	-0.94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 100만원 미만)		
100 ~ 2백만원 미만	1.806	1.95
200 ~ 300만원 미만	0.549	0.61
300 ~ 400만원 미만	-1.330	-1.50
400 ~ 500만원 미만	-3.299	-3.66
500 ~ 600만원 미만	-3.133	-3.46
600만원 이상	-3.908	-4.12
상수항	0.400	0.41
Pseudo R ²	0.293	
표본수	4,774	

표 A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20년) 표본의 분포

구분		비중(%)
성별	남자	49.5
	여자	50.5
연령대	9-12세	32.2
	13-18세	35.4
	19-24세	32.4
주양육자 학력	초등학교	0.0
	중학교	30.1
	고등학교	15.6
	대학(4년제 미만)	24.6
	대학교(4년제 이상)	6.3
	대학원 이상	23.4
지역크기	대도시	44.2
	중소도시	40.8
	농산어촌	15.0
월평균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
	100 ~ 2백만원 미만	2.3
	200 ~ 300만원 미만	4.4
	300 ~ 400만원 미만	17.5
	400 ~ 500만원 미만	31.1
	500 ~ 600만원 미만	23.7
	600만원 이상	20.0
가구형태	양부모 가족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	93.0
	한부모 가족(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아버지와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	1.5
	한부모 가족(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어머니와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	4.9
	조손 가족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0.6
	기타	0.1

8)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조사대상은 다문화청소년 패널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정의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국제결혼가정자녀에 한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나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이기에 결과적으로 본 패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진행되며, 학부모(어머니)의 경우는 한국어 및 총 9개 국어(외국어 밑에 한국어도 함께 제시)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CAPI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고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어로만 구성된다.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상을 후기청소년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종단비교 분석을 통해 집단의 특성과 성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표 A15.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연차별 변화

구분	내용
2019년 (9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1기패널: 1,169가구(학생 1,178명, 학부모 1,145명) 2기패널: 2,224가구 패널 구축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및 패널 추가 구축 → 통계변경승인 진행
2018년 (8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1,220가구(학생 1,229명, 학부모 1,197명)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 통계변경승인 진행
2017년 (7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1,268가구(학생 1,277명, 학부모 1,244명)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 통계변경승인 진행
2016년 (6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1,322가구(학생 1,335명, 학부모 1,304명)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 통계변경승인 진행
2015년 (5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I 1,338가구(학생 1,350명, 학부모 1,330명)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 통계변경승인 진행

구분	내용
2014년 (4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Ⅱ 1,371가구(학생 1,384명, 학부모 1,361명)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 통계변경승인 진행
2013년 (3차 본조사)	사업명 및 조사명 변경 사업명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Ⅰ 조사명 :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1,433가구(학생 1,446명, 학부모 1,426명)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대체양육자용 조사표 추가 국가승인(협의)통계로 지정(승인번호 : 제402003호)
2012년 (2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Ⅲ 조사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MCAPS) 1,490가구(학생 1,502명, 학부모 1,484명) 조사표 일부 문항 변경
2011년 (1차 본조사)	사업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Ⅱ 조사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패널조사(MCAPS) 1,625가구(학생 1,635명, 학부모 1,625명)
2010년 (예비조사)	사업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Ⅰ 학생 416명, 교사 2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9)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학교 등에서 제공한 개인 리스트를 활용한 패널구축을 우선하여 진행되었으며, 2012년 7월 이후 정규 중학교, 일반/특성화 고등학교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해당 기간에 중단했다가 복교한 청소년도 포함)으로 하였다. 부족한 패널은 직업훈련기관, 대안 교육기관, 검정고시 학원, 상담복지센터, 스노볼링, 웹 홍보 등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이들은 중·고등학교 학력(1995년 3월~2001년 2월 출생자)에 해당하고 정규 중·고등학교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도 포함되었다. 특정 기관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 리스트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통해 개별 리스트를 추가로 수합하였다. 특히, 2013년 2학기 발생 학업 중단자를 포함하여 2013년 9월 30일까지 리스트를 수령하였다. 그 결과 총 776명의 패널을 확정하였으며, 1차연도 패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A16.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표본 분포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776	100.0
성별	남자	444	57.2
	여자	332	42.8
연령별	중학교 학령기	76	9.8
	고등학교 학령기	685	88.3
	학령기 이후	15	1.9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일반 청소년 대비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대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의 방향 및 제도의 보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업성취에 있어, 저소득가정과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내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투자에서의 격차에 기인한다. 연간 교육비 지출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429만원만큼 적으며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5.1%p만큼 낮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희망 교육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 내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진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저소득 가정 내 청소년은 만족의 정도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며,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중단 경험이나 의향을 갖도록 한다.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교육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 취약성이 보다 높은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에게서 높은 수혜율을 나타내 다문화가정 내 청소년들 가운데 지리적 요인에 의한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relative vulnerability of vulnerable youth compared to general youth with a focus on education, evaluate the effects of major support policies for them, set the direction for related policies based on the above, and provide implications to supplement the system. In terms of scholastic achievement, youth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or those raised by grandparents tend to show relatively low levels of achievement, which is partially due to the gap in investment for education, including private education. In terms of annual education expenditure, vulnerable youths spend less than 4.29 million KRW than general youths, and their share of education expenditure in the total expenditure is also 5.1%p lower. A relatively low scholastic achievement causes a vicious cycle that lowers the desired educational level of the vulnerable youth, and this is especially noticeable among youths from single-parent families or those raised by grandparents. In overall school life, satisfaction of the youth from low-income families is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you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indicates that vulnerable youths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experience an interruption in studies or are more willing to discontinue studies. Many education-related policies for the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how a higher rate of benefit

among youths living in rural, mountainous, or fishing villages with higher relative vulnerability; this indicates that these policies tend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caused by geographical factors among the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
이우태·이상정·박광옥

2022년 시설외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
장인숙·박환보·최종학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선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선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 크 쉘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2-81-02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88-6 94330
979-11-5654-386-2 (세트)

연구보고 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88-6
ISBN 979-11-5654-386-2(세트)